

석사학위논문

김정일 체제의 연구

-전개과정과 정책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강 영 식

1999년 8 월

김정일 체제의 연구

-전개과정과 정책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양 방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9년 5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강 영 식



강영식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9년 7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국문초록>

김정일 체제의 연구

-전개과정과 정책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강 영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화해·협력을 통한 안정기반 조성
과 남북한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우리가 성취해
야 할 목표라면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김정일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북한문제를 국제정치 문제화하고 국제정치문제를 풀기 위해 군
사적인 비상방법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어려움을 대외로 돌리고 증오와
경각심을 고취시켜 어려움을 참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을 극대화하여 이
해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의 역학관계, 아래로부터의 저항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김정일 정권의 교체 또는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과 같은 상황이 야기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일 체
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남북 화해·협력에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적대관계를 유지
하면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상정하면서 붕괴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 한반
도의 급속한 통일시 통일비용에 대한 국제적 콘소시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 한반도
의 전쟁 발발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러시아 등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정책 전반은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대비해야 할 핵심은 대체적으로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
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견제 및 반발 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
하여 우리는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 둘째, 북한의 비폭력적 붕괴 유도, 셋째, 한반도
의 통일달성이라는 목표아래 「통일을 이끌어내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 논리와 대외전략, 강성대국론, 위기구조와 안정성 등을 중·장기별로 분
석하여 한반도 냉전구조 해결에 신중한 정책구상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김정일의 성장과 등장과정	5
1. 김정일의 성장 과정	5
2. 김정일의 권력 부상과 등장과정	8
3. 김일성-김정일 쌍두체제의 성립	14
III.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 논리와 대외전략	21
1. 김정일 체제의 특성	21
2.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 논리 :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27
3. 김정일 체제의 대외전략	38
IV. 김정일 체제의 위기구조와 안정성 분석	52
1. 김정일 체제의 위기구조와 대응방식	52
2.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 요인	58
3. 김정일 체제의 전망	61
V. 결론	66
참고문헌	71
Abstract	73



I. 서론

정경분리 원칙 하에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등의 정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발표된 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될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대통령이 발표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한 최근 개최된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은 이미 발표된 정경분리 기조 아래 첫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하며, 둘째,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셋째,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이른바 교류협력 3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발표의 내용들과 원칙들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대북정책 3원칙 및 남북교류 협력 3원칙과 10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발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화해·협력을 통한 안정기반 조성과 남북한 주도의 평화체제 구축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평화정착과 한반도 안정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달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장기 목표라면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내부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현재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반도 및 동북아 환경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내부적으로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놓여 있으며 향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신임도 회복에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한국경제는 조만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만 현재의 상황은 남북관계를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경제의 구조조정, 국제사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등을 통한 경제회복에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불확실성의 증대 등 최근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이념적 위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차원을 넘어 북한의 개방·개혁 및 변화의 유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점차 정치·외교·경제·군사·안보문제를 망라하는 복합적이고 종합·포괄적인 성격으로 변모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최근 한반도 문제는 냉전종식에 따른 주변 4강의 대 한반도 정책조정과 북한의 한국 기피·배제정책이 맞물려 점차 국제화·다자화 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식량문제 등은 이미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개혁·개방 및 북한의 연착륙 유도 등과 같은 북한자체의 문제도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안보환경 흐름의 추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에 비해 한국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증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체제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지난 수년간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도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 한국과 과거 적대국인 러시아(구 소련) 및 중국간의 수교로 동북아 냉전구조의 한 축은 이미 무너졌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문의 타결로 미·북관계 및 일·북관계의 개선조짐도 서서히 나타나는 등 한반도 주변의 탈냉전 추세는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한반도 내부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의 군사적 대결구조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철저히 배제한 채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한국기피·배제정책은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공세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그들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한 수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안정유지가 바로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요체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안정유지가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었으며 소련은 연방이 와해되면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아직도 공산당 일당독제 체제가 남아 있으나, 중국은 1978년에 본격적인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이래 10년만에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정치적으로는 1989년의 천안문사태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원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쿠바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를 적극 받아들여 스스로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내적으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및 외채난 등 3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위기에 빠져 있고, 대외적으로는 소·동구권의 붕괴와 한중·한러 수교 그리고 국제적 핵사찰 압력에 따른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김정일이 1992년 4월 자신의 80회 생일을 경축하는 연회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1993년 11월 개최된 노동당 외곽단체들의 전원회의에서는 “영도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김정일 중심의 일치단결을 촉구하였다.

북한에 관한 관심사는 현재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이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김정일 체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에 집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책의 변화방향, 그리고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한가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과 함께 권력유지의 측면을 검토하였다. 지도자 문제를 다룰 때에는 지도자적 자질 즉 리더십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권력과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1991년 1월말까지 간행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은 대체로 현시점부터 2002년 말까지를 염두에 두고 단·중기적 예측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자료적 한계와 기존자료들의 자료해석상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으로 인해 주로 기대에 근거해서 예측하는 것이 그 주조를 이루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염두에 두고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북한 연구 수준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현재 수준에서 김정일 연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제약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들 수 있다. 현재 남북한 어디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공개된 객관적인 1차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에 관해서 의미있는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거의 없다. 유일하게 신상옥, 최은희 부부의 증언이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이데올로기적으로 심하게 윤색되어 있어 자료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북한 보도물에서 그를 다룬 기사들을 추적하는 것 역시 그가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런 경우 연구는 전반적인 북한 역사과정에 대한 이해 위에서 모든 자료의 총체적인 비교와 내용분석, 징후적 분석방법 등을 동원하여 사실 복원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만큼 김정일 연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현존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그를 연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망 설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에 관한 연구는 언론이나 정세분석연구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학문’의 영역에서는 아직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비쳐진다. 물론 사회과학을 시대적 필요정보보다는 훈고학적 자료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선호하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이 입장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역설적으로 김정일 연구를 ‘학문’의 영역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Ⅱ. 김정일의 성장과 등장과정

1. 김정일의 성장 과정

1) 출생에 얽힌 쟁점

김정일은 항일유격대 지도자 김일성과 항일 유격대원이었던 김정숙 사이에서 1942년 2월 16일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김정숙은 1917년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935년 9월 항일 유격대에 가입하여 1936년 이후 김일성이 지휘하는 항일 연군 제1로군 6사에서 공작대원 작식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북한측 문헌들은 그녀가 김일성을 처음 만난 것은 1935년 3월 대항외회의 직후 능가영의 공산당 비서처에서 김일성이 소집한 회의에서였다고 한다. 당시 이들의 만남은 업무적인 것이었고 결혼은 훨씬 뒤에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추측컨대 일제의 계속되는 대 토벌로 1940년을 전후해서 항일 유격대가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인 부부생활은 김일성의 제2방면군이 소·만·국경 근처 소련 영내로 이동해 간 뒤인 1941년경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김정일은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 김일성과 김정숙은 그의 이름을 소련 영웅 조야의 남동생 이름을 따서 ‘유가’라고 지었다고 한다.¹⁾

당시 김일성 부대가 블라디보스톡시 근처의 보로시로프 야영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숙은 김정일을 그곳 야영이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 시내의 병원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일은 태어난 직후 하바로프스크 근처 비야츠코에 야영이 세워진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제1교도영 영장으로 부임하는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비야츠코에로 옮겨갔다. 당시 김정숙의 젖이 부족해서 김정일은 다른 유격대 여전사들의 젖을 많이 먹고 자랐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여장이었던 중국인 주보중을 기념하여 나온 그의 전기 『주보중장군전(周保中將軍傳)』에 따르면 그의 부인 왕일지가 1946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숙을 대신해서 김정일에게 젖을 많이 물려준 재만조선인 항일여전사 이재덕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당시 유격대 야영에는 아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여전사들의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중국인이었던 최용건의 부인 왕옥환은 그에게 중국말을 가르쳤다고 한다.²⁾

1) 이종석(1997),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pp.94~99.

2) 상계서, p.26.

그런데 김정일이 소련 영내에서 태어났다는 위의 설명과는 달리 오늘날 북한 문헌들은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으로 못박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전기들은 백두산 밀영에서의 출생을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오늘날 그가 태어났다는 백두산 밀영의 귀틀집을 성역화하고 있다. 오늘날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와 더불어 ‘고향집’으로 불리며 북한주민들의 ‘혁명전통’ 교육장이 되어 있는 이 귀틀집은 백두산 산록의 소백수골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집 뒤에 있는 산봉우리가 뒤에 북한 당국이 명명한 ‘정일봉’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저한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재일동포들이 쓴 전기(『김정일 지도자 1·2』)부터는 사실과는 달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42년 2월 16일,……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에서 태어나 시었다”라는 기술을 통해서 백두산의 밀영 출생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조직화된 신화는 곧장 북한사회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극단적으로 강조되어 체제신화로 격상되어 있다.

김정일의 출생장소를 사실과는 달리 백두산 밀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공개적으로 부각되면서 그의 생애가 알려진 것이 1980년대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는 북한사회가 이미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시기로서 북한의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김정일의 출생을 소련 영내로 밝힐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주장해 온 항일무장투쟁의 주체성 문제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이론가들은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그의 백두산 출생을 기정 사실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과 항일무장투쟁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그의 생래적인 정통성을 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출생장소 변경의 함의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백두산에 담겨져 있는 그 슬기, 그 염원을 안고 민족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판가리 싸움터에서 고고성을 울리시었던 것이다.”

2) 성장과정 : 해방~1964년

해방 후 김정일이 북한에 들어온 것은 1945년 11월 25일 함경북도 웅기항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때 어머니 김정숙을 따라서 다른 항일빨치산 여전사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다. 한달 가량 어머니 김정숙과 함경북도 청진시에 머무르다가 1945년 12월말에 아버지 김일성이 활동하고 있는 평양으로 왔다.

김정일이 인민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1948년이었다. 이때 그는 평양에 있는 남산 인민학교 인민반에 입학하였다. 김정일 전기들은 이 시기 소년 김정일의 총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예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 시절 소년 김정일에게 다가온 가장 큰 충격은 그의 어머니 김정숙의 죽음이었다. 김정숙은 1949년 9월 22일 사망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문헌들은 김정숙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그녀는 사산아를 낳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은 사망 당시 김정일 외에도 해방 후 귀국해서 낳은 딸(김경희, 현재 조선로동당 경공업부장)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 원래 1944년생 남동생이 있었으나 김일성 수상 관저에 있던 연못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이 사망한 뒤 김정일 남매는 김정숙의 항일유격대 동료였던 김옥순(전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의 부인) 등의 보살핌 아래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중 김정일은 중국 동북지방으로 피난 가 있었으며 피난중인 1952년 11월 그곳으로 옮겨와 있던 만경대혁명자유자녀학원(일명 만경대혁명학원) 인민반 4학년에 편입하였다. 이 사실이 와전되어 일부에서는 그가 만경대학원 졸업생이며 그를 전 인민군 총참모장 오극렬 등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 제1기생이라고 까지 주장하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경대혁명학원이 설립된 1947년 김정일의 나이는 만 5세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 1953년 8월 그는 평양으로 돌아왔으며 곧이어 삼석인민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평양 제4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³⁾

1954년 9월 인민학교 과정을 마친 김정일은 평양 제1초급중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2학년 때인 1955년에 이 학교 소년단 위원장으로 뽑혔다고 한다. 김정일 전기들은 예외없이 그의 학업성적이 전과정, 전과목에서 최우등이었으며 그가 학생들 사이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남산 고급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1957년 9월이었는데, 김정일 전기는 이때도 그는 초급중학교의 전 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치고 고급중학에 입학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중고교 동기 동창생들은 그가 남다른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학교성적은 중간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남산고급중학교에 진학한 김정일은 이 학교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위원장은 교사)을 지냈으며 1960년 7월에 졸업하였다. 고급중학을 졸업한 그해 9월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다. 당시의 풍조가 사람이 대성하려면 외국 유학을 다녀와

3) 상계서, pp.102~106.

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므로 대부분 그가 외국 유학을 떠날 것으로 추측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둔 고급중학교시절 외국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학을 떠나지 않고 김일성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배경을 『김정일 지도자 1』은 다음과 같이 미화하고 있다.

「그분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이 꽃피고 있고 조국의 현실에 기초한 학문을 하시겠다는 투철한 주체의식의 발현이었다. 그분에게 있어서 참된 학문과 교과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 속에 있었다.»⁴⁾

그런데 이러한 북한측의 설명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김정일이 남산학교 고등반까지 수료한 후 동독항공학교로 유학갔으나 망나니 성품으로 인해서 끝까지 수학하지 못하고 2년 중퇴, 1961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편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 어쨌든 김정일은 대학시절 김일성의 저작을 중심으로 1년에 만 페이지를 읽는 이른바 ‘만 페이지 책읽기 운동’을 발기하는 등 다양한 학내 정치활동을 편 것으로 북한 전기들은 쓰고 있다. 그는 1964년 봄에 김일성대학을 졸업하였다. 1964년 3월 18일 발표되었다는 그의 졸업논문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룬 「사회주의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었다.⁶⁾

2. 김정일의 권력 부상과 등장과정

1) 당4기 제15차 전원회의와 김정일의 등장

김정일의 본격적인 정치경력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되는 1964년부터 시작된다.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김일성의 호위를 담당하는 호위과 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선전사년표 2』는 그가 1964~1966년의 3년간 김일성의 현지 지도에 장기출장 15회를 포함하여 모두 31회나 동행하며 후계자

4) 상계서, p.58.

5) 황장엽, 『조선일보』, 1997.4.22. 이에 따르면 김정일은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건결한 의욕의 소유자로서 번덕스럽고 질투심 강하고,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비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6) 이종석(1997), 전계서, p.160.

수업을 쌓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내에서 김정일의 위상은 그의 나이 25세였던 1967년 5월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내 선전, 문화를 담당하던 간부들이 유일사상을 위배하는 정책을 전개해왔다고 비판받고 숙청되었는데 김정일이 바로 이 회의에서의 숙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에서 비판된 사람들의 ‘죄상’을 미리 조사해서 회의석상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전원회의 내용을 녹음으로 청취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의 집중지도 결과를 놓고 직접 비판대상자인 박금철, 이효순 등에 대해서 질책을 가했다고 한다.⁷⁾

당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노동당 내에서 김정일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회의 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당내 사상투쟁을 벌여 나갔으며 김일성 개인숭배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전원회의 이후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했으며, 그는 곧 문화예술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선전선동의 중요 수단인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에 대해서 직접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때 김일성 역시 문학예술의 문외한인 당 기계공업부장 이근모(뒤에 정무원 총리)를 문학예술부장에 앉히고 김정일과 같은 혁명 2세대인 김책의 아들인 김국태를 선전선동부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일의 사상문화 분야의 장악을 도왔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현실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도록』 편찬과 김일성 석고상 제작, 혁명기념비 건립 등을 주도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과정에서 김정일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와 체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직접 지도하던 문학예술인들 사이에는 1969년경부터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⁸⁾

2) 후계자로의 부상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당내 활동의 폭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그의 빠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 대회에서 그는 당중앙위원회

7) 김진계(1990), 『조국』 하, 현장문학사, pp.78~90.

8) 이종석(1997), 전계서, pp.248~302

후보위원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후계문제가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이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의 부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5차 당대회는 뒤에 김정일의 권력강화에 도움이 될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다. 그것은 다음 아닌 1966년 10월에 신설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위상을 강화시킨 것이다. 과거 비서국은 정책 집행 기능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비서국은 ‘간부문제, 대내문제 및 그 밖의 당면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⁹⁾ 물론 이러한 변화가 김정일 후계체제를 대비한 포석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이 1973년 9월이래 비서국을 통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당내 활동의 폭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5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화예술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선전선동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당시 식물신경불화증에 걸려 거의 업무를 보지 못하던 삼촌인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해서 당조직에도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노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즈음이었다. 아마 김일성의 50회생일(1972.4.15)을 계기로 그의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즈음해서 당은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에 대비하여 1972년 말부터 당내 이색적 사상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증 교환사업’을 전개하였다. 1956~1957년에 실시되었던 당증 교환사업 이래 처음 실시된 이 사업은 사실상 1967~1970년의 당간부들에 대한 대량 숙청을 기층당조직으로 연장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기층당조직에 부식되어 있는 반유일사상적 요소 등 이색적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 당증 교환사업 과정에서 상당수의 당원이 유일사상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당에서 축출되었다.

한편 김정일 후계문제는 당내의 세대교체 움직임과 결합되면서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 초·중반부터 조선로동당에서는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가 북한 혁명 30년이 경과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교체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 세대교체 움직임은 김일성이 1973년 2월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으로 사회 전반에서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혁명의 주체로 부상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북한 권력구조 내부에서도 김정일 후계체제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비서국 조직, 선전담당 비서로 선

9) 고유한(1997), “김정일의 공식 승계와 정책 변화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pp.35~36.

임되었다. 곧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내 핵심 권력구조인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이때부터 언론은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¹⁰⁾

당시 김일성을 설득하는 노정치위원(김일)의 말을 옮기고 있는 김정일 전기의 다음 내용은 그의 당서기, 정치위원 선출이 후계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추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청이며 전체 인민의 열망입니다. 아직 젊다고 말씀하시지만 젊고 젊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수령님께서도 일찍이 김정일 동지와 같은 연세에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혁명의 운명의 문제이니 수령님께서 고쳐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된 지 10년도 채 안돼서 당내 최고 권력기구인 당정치위원회 정치위원과 비서국 비서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불과 3년 전의 제5차 당대회 때 그의 공식적인 위치와 비교해 본다면 그의 서기, 정치위원의 취임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조치는 후계체제에 대한 김일성의 구상과 떼어놓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김정일은 당정치위원에 취임하자마자 곧 명실상부하게 당내 실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정치위원 취임은 당내 권력구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부상은 혁명 1세대들의 퇴진을 재촉하고 지도부 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켰다. 김정일이 당비서가 되어 당권 장악에 나선 1973년 가을 이후 혁명 원로인 최용건(국가 부주석)과 김일(정무원 총리)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반면에 이후로 혁명 2세대나 실무형 지도자들의 발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당권을 장악하면서 1974년 10월 경제문제에 개입하여 속도전을 내세우며 이른바 ‘70일 전투’를 발기하였다.¹¹⁾ ‘70일 전투’는 김정일의 지도아래 1974년 10월 하순부터 12월말까지 70일간 북한경제 전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김정일은 이 기간 동안 모든 당 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게 각 시·도·군과 공장, 기업소에 유능한 일꾼들로 ‘70일 전투’ 지휘부를 조직하고 중앙과 도에는 ‘종합그루뵈’를 조직하여 그들이 각 지방의 전투를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는 참모부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10) 이종석(1997), 전계서, pp.307~309.

11) 상계서, pp.227~228.

『조선로동당략사』에 따르면 ‘당중앙’이 지도한 ‘70일 전투’는 대성공으로 끝나 1974년 11월과 12월의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148%, 152% 증가하였다고 한다. ‘70일 전투’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약 300명의 노동자에게 ‘노력영웅’ 칭호가 부여되었으며, 15만 명의 노동자에게 국가 훈장이 수여되었다고 한다.¹²⁾

북한문헌들은 김정일이 ‘70일 전투’를 통해서 1970년 2월 예술영화 《한 자위대원의 운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조했다는 속도전¹³⁾의 ‘전형’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70일 전투속도’라고 명명된 이 속도는 김정일의 지도 아래 ‘70일 전투’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창조했다는 새로운 진군속도를 일컫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70일 전투’의 성공적 수행으로 김정일은 당내에서 경제관리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지도영역은 경제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김정일은 또한 정치위원 취임을 계기로 그때까지 김일성이 지도하던 3대혁명소조운동을 자신이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3대 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상·문화·기술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기 위한 운동’으로 ‘혁명적 군중노선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현한 현대적인 혁명 지도방법’으로 규정된다.¹⁴⁾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과 국가기관의 일꾼과 과학자·기술자·청년 인텔리로 구성된 3대혁명소조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 장기간 사업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북한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지도하면서 이 운동의 지도체계를 자신이 관장하는 당중앙위원회로 집중시켜 자신의 유일적 지도아래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고쳤다. 이른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가 관철되도록 지도체계를 고친 것이다. 그는 1974년 2월 공업과 농업 분야의 3대혁명소조를 따로따로 지도하던 기존의 체계를 폐지하고 당중앙위원회가 이를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1975년 3월에는 중앙과 도·시·군에 있는 ‘3대혁명소조 종합실’을 ‘3대혁명소조 지휘부’로 개편하였다.¹⁵⁾ 즉, 지금까지 당과는 독자적으로 편성 운용되어

12) 상계서, p.240.

13) 북한에서 속도전이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진개 원칙”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속도전은 “일단 시작한 일을 늦잡지 않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불이나게 해제끼며 쉽없이 새로운 혁명사업 수행으로 돌진해 나가는 전격적인 원칙과 사업에서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문제를 하나하나씩 모가나게 해가는 섬멸전의 방법에 의해서 담보된다.” ; 한중호(1997),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실제와 전망”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14) 사회과학출판사(1985), 『경제사전』 2, 평양: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p.28.

15) 조선노동당출판사(1982), 『인민의 지도자』 2, p.176.

문제가 많았던 3대혁명소조운동체계를 당의 장악하에 움직이도록 재편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체계의 재편은 당 주도하에 3대혁명소조운동과 당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당시 북한사회 모든 활동을 장악하고 있던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서 김정일의 영향력과 이미지가 전체 사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은 ‘70일 전투’의 발기와 3대혁명소조운동의 본격적인 지도로 북한사회 전반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김일성이 직접 관장해 오던 다양한 대중운동을 직접 지도하기 시작했다. 1975년 11월에 발기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79년 10월에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을 발기하였다.

이렇듯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당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돌풍을 일으키면서 권력구조 내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당내에는 김정일의 ‘전횡’에 불만을 가지는 간부들이 생겨났고 생산현장에서는 김정일이 지도하는 젊은 3대 혁명소조원들이 기존 간부들과 마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6월에 개최된 정치위원회에서 항일유격대 출신 당정치위원 겸 비서인 김동규가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성도 김동규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때부터 김정일을 자숙시키기 시작하였다. 언론에도 ‘당중앙’이라는 말이 극히 제한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1977년 가을 결국 김동규와 그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들이 숙청되고 김정일은 1977년 11월부터 당시 당지도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이 사건의 여파로 1978년까지 그는 조심스럽게 활동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은 김정일 후계자 부상의 속도 조절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후계자 부상과 관련하여 1966~1978년 사이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후계문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그의 후계체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문화혁명 중에 북한은 이 혁명을 ‘좌경’ 혹은 ‘교조주의’로 단정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중국과 갈등하였다. 때문에 중국의 사상 강조에 대해서 북한은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동시 점령’이라는 구호로 맞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일성 지도부는 문화혁명과 갈등하면서 그 대칭점으로 모택동수령 대신 김일성수령을 내세우고 모택동사상 대신에 김일성사상(주체사상)을 내세움으로써 개인숭배와 자기사상의 절대화라는 질곡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반목했던 중국정치에서 전개되던 후계자 문제에도 민감하게 순응적 영향을 받았다.

1971년 9월 후계자 임표의 반란(9·13사건) 역시 북한의 후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후계자의 제1덕목으로 삼도록 하는데 임표사

건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함께 임표사건은 그동안 모택동 개인 숭배운동을 주도하고 모택동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미하던 후계자가 반란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조선로동당에서 후계자 문제를 혈족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대두시키는데 촉진작용을 하였다. 임표가 모택동의 혁명동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원로들도 임표사건이 오이비락격으로 자신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파장을 우려했을 것이며, 그 결과 혁명원로들이 먼저 김정일 후계자 확정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높다.

1973년 8월에 열린 중공 당제10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38세의 상해 노동자 출신 왕홍문(王洪文)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후계자의 자리에 오른 사건이 일어났다.¹⁶⁾ 즉, 중국에서 30대 후계자가 등장한 것이다. 세대교체의 돌풍 속에 발생한 이 사건이야말로 30대 초반의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정시키는데 따르는 부담을 희석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왕홍문이 후계자가 된 지 5일 뒤인 1973년 9월 4일부터 열린 조선로동당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로 선출되었으며, 이듬해인 1974년 2월에 후계자로의 공인을 의미하는 정치위원에 선출되었다.

중국의 후계자 문제가 마지막으로 김정일 후계체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모택동이 후계자로 선택한 화국봉이 모택동 사후 등소평 등 혁명원로들에 의해서 실각한 사실이다. 이 사건은 특히 수령의 후계자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실각할 수 있다는 교훈을 김일성 지도부에게 던져줌으로써 김정일이 당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유일적 지도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3. 김일성-김정일 쌍두체제의 성립

1) 후계체제의 확립과 수령 승계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제5차 대회가 있는지 10년만에 열린 이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중앙지도 기관 선거를 통해 신세대의 등장과 함께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중앙조직의 경우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정치국이 신설되고 정치국 내에 정치국과 같은 기능(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16) 고유한(1997), 전계서, p.107.

조직 지도한다)을 하는 상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물론 이러한 중앙조직의 개편은 두말할 나위없이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회의는 먼저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김일성을 선출한 뒤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을 선출하였으며, 정치국 위원으로 상무위원들을 포함하여 박성철 최현 등 정위원 19명과 후보위원 15명을 뽑았다. 이와 함께 비서국 비서로는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하여 10명을,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하여 19명을 선출하였다.¹⁷⁾

이상의 지도부 인선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정치국·비서국·군사위원회라는 당내 3대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되었다. 이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공식서열로는 김일성 김일 오진우에 이어 4위였으나 실질적으로 2인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을 제외한 상무위원 3명중 국가 부주석 김일은 건강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고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정일 측근이었으며, 정무원 총리 이종옥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실무형 지도자였다. 따라서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의 2인 위원회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상무위원회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기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6차 당대회가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위치 강화 때문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대회가 1980년대의 중요한 과제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된 제6차 당대회 결정서는 1970년대 총결기간 동안 당내에서는 당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 주된 성과는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가 다져진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김정일이 지도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진행된 세대교체 작업과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당대회 결정서는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현실은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체의 혁명의 대를 잇는 과업’을 제기하였다.¹⁸⁾ 이것은 당이 1980년대에는 전사회적인 세대교체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상계서, pp.34~37.

18) 통일부(1998.9.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결과』, p.67.

제6차 당대회에서 내외에 공식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자의 위치가 공개된 뒤 북한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찬양이 공개화 되기 시작하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보도 출판물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1960, 1970년대에 보여준 ‘뛰어난’ 지도력을 선전하는데 동원되었다.

북한문헌들이 1960년대 말 이후 1970~1980년대에 이루어진 북한사회의 중요한 사업과 성과들을 대부분 김정일의 치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제로 김정일이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주체사관에 입각한 서술이 갖는 특징이다. 주체사관은 자주성에 기초한 주체적 관점을 견지하고 ‘수령’의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는 지점을 서술하며 ‘수령’지도의 당연한 귀결로 승리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체사상체계는 ‘수령’의 지도와 후계자의 지도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령의 업적과 후계자의 업적은 분리되지 않는다. 셋째, 김정일의 인민적 정통성 확보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6월부터는 언론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 대신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⁹⁾ 1982년부터는 그를 찬양하는 전기들이 출판되었으며 그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 혁명 사적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²⁰⁾

김정일은 1982년 7월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1978년에 시작)이 예상외로 부진하게 추진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 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²¹⁾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 경기장,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와 문수거리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얻은 건설속도를 모든 부문에까지 확대시켜 생산과 건설에 일대 약진을 가져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1982년 7월 김책체철소의 노동자 쫄기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의 현지 지도의 빈도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에 김정일의 실무지도와 시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²²⁾

19) 『내외통신』 1795호, (1981.6.6) p.17.

20) 김정일 관련 사적지로는 백두산 밀영 혁명사적지(그의 출생지로 선전되는 곳), 어은산 혁명사적지(평양시 어은동, 김정일이 어린시절을 보낸 곳), 덕골 혁명사적지(평북 구장군, 전쟁 당시 그가 장자산으로 피난가다가 하루 낮 동안 체류했다는 곳), 장자산 혁명사적지(자강도 강계시, 그가 전쟁 당시 피신하여 전선원호사업을 했다는 곳), 『내외통신』 567호, (1987.12.11), p.295.

21) 『내외통신』, (1984.11.30), pp.73~78.

초기 김정일의 실무지도나 시찰은 주로 문화, 보건, 체육 등에 치중되고 김일성의 현지도나 시찰을 수행하는 보좌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1983년부터는 경제, 군사 부문 등에게까지 공개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그 성격도 ‘보좌’에서 독자적인 ‘지도’의 측면이 더 강해졌다.²³⁾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권력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사회 등 실무분야에서 자신의 현지도의 역할을 김정일에게 넘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실무지도나 시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경공업,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은 인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회주의 개혁이 휘몰아치는 1980년대 말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정일의 공개적인 현지도와 시찰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언론들의 그에 대한 개인숭배 캠페인도 가속화되었다. 평양방송은 그의 ‘탁월한’ 지도능력을 선전하기 위해서 1984년 5,6월 김일성의 동구 방문기간 중 “전체 당원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영도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 총공업생산액은 작년 비례 117% 신장했다고 발표하였다.²⁴⁾

신문들은 공식석상에 나온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그의 이름을 다른 지도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활자로 쓰기 시작했으며 1987년이래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김정일선집』 등 여러 이름으로 그의 저작들이 출판되어 대중학습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 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북한사회에서 ‘수령의 후계자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²⁵⁾

김정일 개인숭배 캠페인은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먼저 북한의 이데올로기들은 인민적 정통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먼저 그의 생래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항일 유격대 대장 김일성과 유격대 전사 김정숙을 부모로 둔 이른바 ‘혁명적 가문’과 자

22) 김일성의 1978년도에서 1984년도까지의 현지도의 빈도수와 지도 일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9회 41일, 1979년 14회 53일, 1980년 13회 35일, 1981년 13회 35일, 1982년 1회 24일, 1983년 6회 15일, 1984년 2회 2일, 한편 같은 기간 김정일의 실무지도는 1981년 3회, 1982년 2회, 1983년 3회, 1984년 7회였다. 『내외통신』 412호, (1984.11.30), pp.76~77.

23) 1983년 김정일의 현지도 대상은 남포감문 건설현장과 고급장교 교육기관인 조선정치대학, 외교관 접대시설인 옥류관 확장 공사장이었다. 그리고 1984년 실시된 7회의 실무지도는 경공업, 중공업 공장들과 대규모 건설현장, 수출품 전시장 등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의 실무지도가 묘향산 개발지구, 각종 경기장 등에 치중되었던 1981, 82년도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양상이다. 『내외통신』 360호, (1983.12.2), pp.60~66.

24) 『내외통신』, 412호, (1984.11.30), pp.73~84.

25) 윤진현(1986),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주체사상연구』, 형설출판사. pp.161~163.

신의 ‘비범한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생래적 정통성 강조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항일의 역사와 백두산의 이미지를 겹친 위에 김정일 출현에 대한 예언설적 믿음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 김정일 카리스마 구축의 2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부터 북한의 이데올로기들은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산록의 밀영으로 조작하였다. ‘백두산 밀영 탄생’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들은 1987년부터 구호나무 학습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대내적으로 전개하였다.²⁶⁾

이 학습의 목표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이 미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항일선열들이 이미 예언했다는 담화를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구호나무란 항일 무장투쟁 시절 유격대원들이 김정일의 탄생에 즈음하여 새로운 미래의 민족지도자(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나무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2천만 백의민족 대통운 백두광명성 출현”과 같은 구호를 써넣었던 것이 고목이 되어 남아 있다는 나무를 말한다. 물론 구호나무는 분명히 있었지만 김정일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역사로서 실재했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생래적 정통성 강조와 함께 김정일이 북한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그때까지 북한사회에서 쌓은 ‘업적’들을 내세우며 인민적 정통성의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재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불운하게도 각론에서 그의 업적으로 뒤덮여 있다고 선전되는 이 시기가 총론에서는 저발전과 침체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편 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전체사회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김정일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82년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선거 때는 황해북도 송림에서, 1986년 제8기 선거에서는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에서, 1990년 제9기 선거에서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주민들의 대대적인 후보 추대 행사를 거쳐서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의 증대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1980년대 내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

26) 북한은 1987년 5월 백두산 밀림지대에서 구호나무를 발견한 이래 오늘날까지 백두산에서 황해도 구월산에 이르는 북한 전역에서 수많은 구호나무를 발굴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구호나무의 전국적인 발견은 그의 백두산 출생주장과 함께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여겨진다.

다. 이것은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다른 당내 주요 인사들이 중앙인민위원회를 포함한 정권기관의 주요 기구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승계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김정일은 국가기관에서도 직책을 맡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다시 1991년 12월에 1950년 7월 이래 김일성이 맡고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서 1993년 4월 ‘군사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격상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그동안 준비해온 대로 자연스럽게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수령’의 자리에 올랐다.

2) 김일성 신격화와 유훈통치

지난 46년간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격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 우상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가 집무했던 금수산 의사당은 방부처리된 그의 시신이 안치됨으로써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금수산 기념 궁전은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쳐 김일성 사망 1주년인 1995년 7월 8일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는데, 1997년 그 앞을 1킬로미터 길이의 대리석으로 포장하였다.

그 밖에 수십 개의 김일성 기념 구조물들이 그의 사망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되었다. 그의 85회 생일인 1997년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85미터 높이의 기념비를 평양 순안공항과 평양시내의 4·25인민문화궁전 사이의 도로 한가운데에 건설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원은 전체 건설비용이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붕괴 직전의 취약한 경제하의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 수 없다.²⁷⁾

무엇보다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새로운 달력을 채택하였는데, 1997년은 주체86년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김일성의 86회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7년 9월 9일부터 북한의 모든 출판물들은 서기를 괄호 안에 넣어서 주체 연호와 서기를 동시에 표기하였다.(예 : 주체86[1997]년 9월 9일 : 주체87[1998]년 1월 1일)

27) “북한, 정치 선전에 26억불 투입 김일성 사후 기념탑 등 건설” 『조선일보』, (1997.5.16).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의 정치적 충고와 정책 지도에서의 유훈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7년에 6권 분량의 『김일성저작집』이 출판되었는데, 이로써 『김일성저작집』은 총50권 분량의 전집으로 되었다.²⁸⁾ 대부분의 저술들이 망자(亡者)에 의해 씌어졌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비난받고 있는 김일성 자서전 제7권 『세기와 더불어』는 그가 죽은 지 3년 후인 1997년 7월에 출판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자서전 두 권이 함께 출판되었다.²⁹⁾

남한언론에 의해 유훈통치³⁰⁾ 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과거 김일성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이 통치하지만 김일성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시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읽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한 김일성 정권의 쇠퇴기에 사실상의 권력 이행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부하들의 육성보고와 더불어 김정일이 준비한 녹음보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그의 아들이 사실상의 북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³¹⁾ 1994년 1월 김일성은 “우리 나라에서는 김정일 장군이 당과 국가와 군대의 모든 업무를 현명하게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계문제는 훌륭하게 해결되어 왔다”³²⁾고 말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명백한 후계자로 지명하고 승계계획의 점진적 수행을 확고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김일성이 만약 그의 ‘혁명적’ 전통이 그의 사후에도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희망했다면 적어도 잠깐 동안은 그의 허황된 꿈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역에 내걸린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는 사실상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즉 상징적 차원에서 수많은 동상과 기념비를 통해 북한의 산하에 군림하면서 그리고 수백만 북한주민의 감동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계획적으로 김일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28)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 『로동신문』, (1997.4.10).

29) 『로동신문』, (1997.7.20),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책제목은 각각 『영생불사의 주체사상 창시』와 『항일혁명의 역사적 승리』이다.

30) 김일성 사후 김정일 중심의 북한지도부가 새로운 지도이념이나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죽은 수령의 권위에 의하여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등식하에 ‘김일성식’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과도기적 통치방식이다.

31) 사망하기 3개 월 전에 1994년 평양에서 가진 Washington Times지와 회견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시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일이) 모든 보고를 녹음해서 준비해 주므로 그것들을 일일이 읽는 시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만일 내가 지방에 가지 못하면 그다 나를 위해 내 비서에게 대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다.” *Washington Times*, (April 19, 1994).

32) 『로동신문』, (1994.1.5).

Ⅲ.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 논리와 대외전략

1. 김정일 체제의 특성

1) 김정일 총비서 기간(1997.10.8-1998.9.4)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승계는 공식적으로 김일성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일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는 북한이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 3개월간 계속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방식에서 탈피, 사회주의체제의 핵인 당총비서가 비로소 그 얼굴을 내외에 들어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수 십년간 왜곡돼 온 정치체제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는 항일 유격대 출신임을 내세워 권력을 창출했던 김일성과는 달리 이렇다할 자생적 권위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군사 무장투쟁에서 나왔다. 오늘날의 북한이 병영국가가 된 것도 여기에 연원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절대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은 김일성 생존시부터 20여 년간 치밀하게 이루어진 선전과 세뇌학습의 결과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도자적 이미지중 대부분은 김일성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김정일은 그동안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비워둔 채 국방위원장과 군사최고사령관의 직함만으로 통치해 오면서 공식활동의 상당부분을 군부대시찰에 할애했다. 군을 우대하고 이를 통치기반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김정일은 이와 함께 혁명1세대가 물러난 당·정·군의 요직을 자신의 측근들로부터 채우는데 주력해 왔다. 북한의 신진 실세들은 그의 측근이다. 그러나 황장엽씨 망명사건이 시사하는 바와같이 북한 권력집단의 내구력과 결집력은 북한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김정일이 북한을 경제 식량난과 외교고립 등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일이 풀어야 할 난제 중엔 대미외교와 대남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북한이 생존차원에서 절대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기대대로 '구세주' 역할을 해 줄 것인가 불확실한 탓이다. 또 '철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한 마당에 유일한 '적'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김정일에게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살기 위해선 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김정일이 개혁

개방과 대화쪽으로 유연하게 방향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가 북한의 몫으로 남겨놓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³³⁾

2)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간(1998.9.5~)

(1) 세대 교체³⁴⁾

북한은 1998년 9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 추대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4년만에 김정일의 승계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은 ‘혁명2세대(빨치산2세대)’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24년만에 세대교체가 완료된 것이다. 이종옥·박성철·김영주·전문섭 등 살아있는 혁명1세대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서운석(전 평남도당책임비서), 박용석(전 정무원 철도부장) 등 ‘혁명2세대’의 선두주자 가운데 일부도 현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50, 60대의 신진 전문관료들이 대거 등용된 내각의 세대교체가 눈에 띈다. 1997년 대거 교체된 지방행정경제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 등의 중간 관리층과 1998년 전면 교체된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대중 단체의 책임자들은 10년 이상 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8년 7월 북한 전역을 걸쳐 실시한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특징은 총 687명 중 새로 선출된 대의원은 443명으로서 교체율 64% 기록(제9기 교체율 31.4%)하였고, 사회 전반에 걸친 군부의 역할 증대에 상응하여 군장령 및 군관이 101명에 달하였고(제9기 57명), 주요 탈락자로는 와병설의 강성산, 숙청설의 서관희·이봉원·최용해·김달현·현철규 등이다.

대남관련 인물 중 존속 인물로는 김용순·오극렬·강관주·임동옥·이종혁·염태준·백남준·한시해·강영섭·박태호·백인준·장재철 등이며, 탈락자로는 권희경·전금철·안병수·임춘길·강병학·한영수·이몽호·김대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최근 건강이상이거나 대남사업에서 업무실패를 드러낸 인물들이다.

대의원선거에서 대남정책 관련인물의 부침을 통해서 본다면 몇몇 대남관련 인물들이

33) 『동아일보』, (1997.10.9).

34) 정창현(1998), “세대교체와 당·정·군의 관계 변화”, 『통일경제』10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8~13.

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이유는 최고결정권자는 김정일이라는 점과 김용순·오극렬을 비롯한 대남관련 고위간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오극렬(당 작전부장)은 1998년 6월 속초 잠수정침투사건과 1998년 7월의 무장간첩침투사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으며 대남 침투공작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 권력 구조 개편³⁵⁾

김정일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에 권력분산을 꾀했다. 즉,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 실질적 최고권력을 행사하면서 상징적인 국가 대표권과 그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에게 맡기고, 정부 대표권 및 그 역할은 내각 총리인 홍성남에게 맡겼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이전 시기에 당총비서와 내각수상인 김일성이 실질적인 1인자와 권력을 행사하고 형식상 국가수반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과 최용건에게 맡겼던 구조를 연상케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북한이 형식상으로나마 '집단지도체'를 채택했다고 평가했지만, 김정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과도한 해석이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북한은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하였다. 내각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하였다. 실무 전문관료를 중심으로 진용이 짜여진 '경제내각'의 성격이 뚜렷하다. 내정, 특히 경제문제만은 내각이 책임지는 '내각책임제'로 변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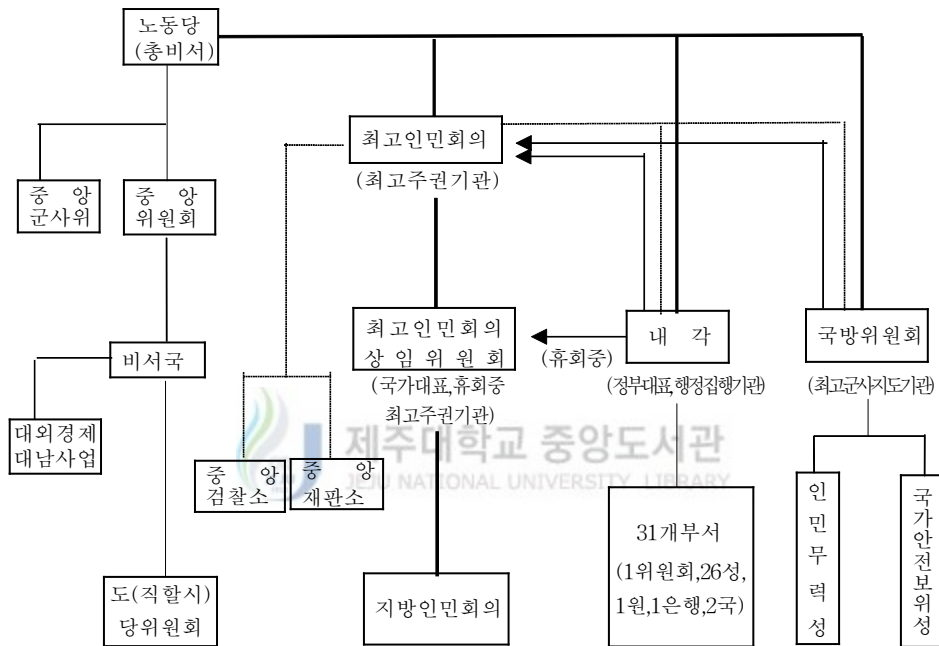
10명 내외이던 부총리도 2명으로 줄였다. 부총리에는 채취공업부장 조창덕과 기계공업부장 곽범기가 승진 임명되었다. 두 사람 모두 전문 기술관료 출신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총리의 위상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은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 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대외관계에서는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내각이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 되어 행정·경제·사업 전반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내각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게 하였다. 즉,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이 외교·국방·내정을 분담하는 체제로 권력구조가 개편된 것이다. 물론, 그 정점에는 당총비서·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김정일과 로동당이 있다. '비상과도체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은 당과 군 사업에 주력하고 대외적 의전과 내정은 측근에게 맡긴다는 구상을 이번 권력구조 개편에서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35) 통일부(1998), 전계서, pp.12~15.

권력기구 체계도

=당의영도
 —기본지도체계선
 ...선출
 ←사업책임



- 노동당(총비서 김정일)은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을 영도(헌법 제11조)
-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 위원장(김정일)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헌법 제100조, 102조)
-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 상임위원장(김영남)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헌법 제106조, 111조)-외국사신의 신임장 접수
-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총리(홍성남)는 정부를 대표(헌법 제117조, 120조)
- 사업책임 :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헌법 제105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최고인민회의(헌법 제116조)
 내각→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헌법 제125조)

자료 : 통일부(1998.9.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의 결과』.

(3) 당·군 관계의 상호경쟁과 균형

문제는 군의 역할과 위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과 군의 위상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곧바로 승계하지 않고 군부대를 집중 방문하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군부에 얽혀 있다거나 당보다 군이 우위에 서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군 체제가 군·당 체제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에 주목, 국방위원회가 쿠바의 국가평의회나 군부체제의 군사평의회와 같이 국가정책 결정의 핵심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³⁶⁾

‘군민일체’, ‘수령 결사옹위정신’ 등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들이나 정책들은 군사적 색채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체제의 본격 개막과 함께 북한이 내세운 첫 선전 구호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軍民一體’의 군사 기풍이 강조되고, 대외적으로 군사우위의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이 아직까지 당우위의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1998년 9월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당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의 모든 정책적 결정은 아직 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정치국회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열렸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실이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당·군 관계에 대해 김정일은 이미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³⁷⁾

“당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혁명을 령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군대를 틀어쥔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을 령도하는 당은 군대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는 당권이자 군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당과 군대는 인민의 운명이며 생명입니다.”

김정일은 체제 유지를 위해 당과 군을 앞세우고 있고, 당·군의 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대에 대한 당의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군이 당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볼 것이다.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98.9.7)도 강성 대국의

36) 김연철(1998), “가부장적 권력과 군사 국가의 결합”, 『통일한국』10월호, p.31.

37) 김정일(1997),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1.1.5.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선집』 1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p.24.

의미를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강성 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사상)과 군(총대)을 두 축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김정일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따라서 1998년 9월 9일 열린 북한 정권수립 50주년 행사의 주석단 서열에서 군부 인사들이 상위에 오른 것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열리는 정치행사의 주석단 배치는 당조직 지도부에서 기획하며, 일반적으로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군부 인사, 비서국 비서, 정무원 부총리 및 부총리급, 우당 대표순으로 배치된다. 군부 인사의 위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일부 변화되기도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1998년 9·9절 행사의 주석단 배치는 김정일에서 한성룡까지가 정치국원급, 양형섭부터 홍석현까지가 정치국 후보급 및 당비서, 백학림부터 이하일까지가 군부인사, 조창덕부터 김윤혁까지가 부총리급이고 마지막으로 김영대와 유미영이 우당 대표로 배치됐음을 알 수 있다. 상위에 배치된 군부 인사가운데 조명록·김영춘·김일철·이을설은 군부 인사라는 성격보다는 이들이 이미 당정치국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이 김일성 사망 후 계속 주석단 서열에서 정치국원 자리에 배치되는 것은 이때부터 이미 정치국원에 보선됐거나 이에 해당되는 대접을, 또 이들이 내각 총리인 홍성남보다 앞서 배치된 것은 이 행사가 군 열병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조명록 등 일부 군부 인사들이 주석단 서열 상위에 오른 것을 근거로 군 우위 내지 군부의 입김 강화, 나아가 군정 통치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이다.

이번 권력 구조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에서 당의 영도나 당·군 관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집행하는 최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여전히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역할이다. 즉, 북한의 사실상 최고 군사 기구는 국방위원회에 회부되는 모든 사안을 사전에 토의·결정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 중시정책’과 관련해 노동당의 이원화 경향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원화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7년 태양절 선포와 당총비서 추대 행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동격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부각시켰다. 김일성 주석사망 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의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로 발표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명칭과 혼용해 썼다.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와는 별도의 독립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과거 당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국방·군수 분야를 분리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⁸⁾

즉, 김일성 사망 이후 노동당이 당중앙위원회에서 당 조직과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내 당 조직과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당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 가지고 있던 군 인사권도 총정치국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체의 강성대국’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군의 위상 강화와 당·군 일체의 강조로 군 인사의 당료화가 확산되고 당과 군의 경계선이 모호해 질 수도 있다. 김정일은 당조직과 군조직을 적절하게 상호 경쟁·균형을 유도해 유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2. 김정일 체제의 정당화 논리 :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1) 사회주의 강성국가론의 등장 배경

북한은 공화국 창건 50돌을 기념하는 1998년 9월 9일 로동신문 사설에서 김일성 체제의 근본 지침이었던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노선을 이어받아 김정일 체제의 근본 지침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을 들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하시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진지를 비상히 강화하시었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를 실시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다지시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은 국제역

38) 김정일의 현지 지도 때 군과 민간 분야를 불문하고 당비서국 성원과 총참모부 간부를 함께 수행시키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39) 고병철(1998), “김정일정권의 정치체제·비교적 시각”,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pp.93~97.

량의 활용, 국내혁명 역량의 강화, 그리고 남한혁명 역량의 강화를 통한 탈냉전 셋 중 생존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사상과 정치의 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강성대국 건설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불패의 군사강국을 들고 「더욱이 오늘 국제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고 있는 조건에서 무적의 군력없이 나라의 존엄과 혁명의 생취물을 지켜 낼 수 없다...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 한다고 해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는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총폭탄 정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필승의 강군,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통해 난공불락의 보루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경제의 강국을 들고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광명성 1호」는 이러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복합적 노력의 결실로 보아야 하며,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사고, 행동양식, 그리고 정책방향의 앞날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내용 중에서 특히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의 논리에 기반한 경제의 강국보다 혁명의 논리에 기반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그리고 전쟁의 논리에 기반한 군사의 강국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청사진에 따라 강성대국이 건설되는 한, 경제의 논리가 혁명과 전쟁의 논리를 압도하기보다는 경제의 논리가 혁명과 전쟁의 논리를 쉽사리 완화시키기 어려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통치권자는 물론 인민 대중들로부터도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적 강령, 또는 새로운 국정 지표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론’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령중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개혁·개방을 통한 목표로 사회주의 강대국론을 입론했듯이, 국가적 목표로 현 체제를 유지해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강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의 공식 구호로 자리매김되어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든 사설·문건·연설에서 재차 반복되고 있는 바, “피눈물의 바다와 고난의 사선 천리를 헤치고 거연히 일어난 조선이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진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1998년 9월 7일자 『로동신문』은 강성대국의 의미를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같은 소국도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단결되고 자위적인 무력이 갖춰진다면,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강성대국은 인민 대중이 역사의 당당한 자주적 주체가 되고 자주·자립·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는 강대한 국가·정치와 군사·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봉우리에 우뚝 솟은 나라, …착취와 억압·가난과 무지·침략과 약탈·지배와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국가 건설사에 종지부를 찍은 “영원한 리상국”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선은 사회주의의 길에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1)사상:올바른 지도사상과 자주적 정치철학 (2)강력한 군사력 (3)비약적인 경제건설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先 사상·군사건설, 後 경제건설’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령중심의 사상 강국건설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상식처럼 강대국이란 경제력이나 무장력 등의 물력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 중심의 사상 강국건설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된다.

그리하여 향후에도 북한에는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붉은기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사상학습이 강도 높게 전개될 것이고, 이를 통해 내부의 단결을 확보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사회주의 강성국가론의 내용

(1) 사상의 강국

대내정책에서 김정일은 이데올로기적 사상 주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배경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김정일은 그의 부친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급을 가속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김일성 우상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이것이 그의 부친이 그를 후계자로 결정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⁴⁰⁾

40) 고성준(1998),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대북정책의 과제”, 『통일문제연구협의회세미나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16.

김정일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김정일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작이 그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도덕적 자극’의 중요성을 신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회의 주인인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고 노동과 ‘인민의 머리’에 남은 구시대의 사상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물질적 자극’이 필요함을 인정했다.⁴¹⁾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 김정일은 붕괴된 정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수정주의 정책들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수정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주의의 변질 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는 것이다.⁴²⁾

김정일은 북한은 그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의 가뭄과 2년 연속된 호우를 포함한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촉발된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평양의 정치 용어집의 일부분이 된 주목할 만한 구절은 바로 ‘붉은기 사상’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청년동맹이 1997년 1월 1일 기관지에 개재한 공동사설은 “혁명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의지가 붉은기 사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보위하고 끝내기 전에는 우리는 쉴 곳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였다.⁴³⁾

41) 김정일(1992),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pp.218~229.

42)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2.4).

43)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내자”, 『로동신문』, (1997.1.1), 이 사설에서 ‘붉은기’와 ‘붉은기 사상’이 주체와 주체사상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었다. 붉은기는 다섯 차례 언급되었고, 붉은기 사상은 여섯 차례 언급된 반면 주체는 4차례, 주체사상은 단 한 차례만이 언급되었다.

경제적 어려움도 김정일 정권이 주민의 사상적 의식을 고양하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노력 배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각계 각층의 군중이 참여하는 정치집회와 각종 집단의 모임들을 후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996년과 1997년에 그러한 집회와 모임들은 평균 한 달에 두 차례로 열렸다. 1998년 1월에 ‘전국 자력갱생 모범일꾼 대회’가 평양에서 이틀간 열렸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순수하게 자력으로만 상품을 생산하고 기능하는 단위들의 모범 노동자와 혁신가들과 중앙 기구의 간부들 및 시·군 및 국영 기업체의 당 일꾼들과 기타공장, 기업체, 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이었다. 당기구의 책임 비서들과 가장 성공적인 공장과 기업체 및 그 밖의 단위들의 지배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보고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단위들도 그것을 모방하고 나아가 그것을 능가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성공 사례를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분명한 목표였다.⁴⁴⁾

또한 김정일의 논문들은 수 차례 출판되어 정치학습과 실천 지침의 교재로 보급되었다. 그 중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정일은 1996년 7월 26일에 조선로동당의 이론적 잡지인 『근로자』에 “주체사상은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김정일은 1997년 6월 19일자 『로동신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⁴⁵⁾

(2) 정치의 강국

북한 정치체제의 개념화에는 권위주의 국가,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수령제 유격대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⁴⁶⁾ 최고지도자에 집중된 개인의 우상화가 그의 지배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북한에서 그것의 위대함은 정말로 놀랄 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은 구 소련의

44) 『로동신문』, (1998.1.30).

45)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6.21), pp.1-3. 북한에서 출판되고 정치학습의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김정일의 다른 저작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영원토록 공경하고 그의 위대한 혁명적 과업을 완성시키자”라는 제목으로 1996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의 ‘대표 일꾼’들에게 한 연설과, 1996년 10월 1일 김일성대학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전달한 장문의 편지,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민족혁명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수행하자”라는 제목의 논문, 그리고 1997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전달한 편지 등이다. 『통일신보』, (1996.11.30), 『로동신문』, (1997.8.20), (1997.10.13).

46) 고병철(1998), 전계서, p.148.

스탈린 우상화와 문화혁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모택동 우상화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북한에서의 우상화는 정도와 기간 면에서 과거의 것들의 빛을 가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치하의 북한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7월 이후 ‘최고지도자’가 지배하는 북한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존재해 왔다. 사망한 김일성과 그의 승계자 김정일이 모두 그러한 숭고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에게 ‘수령’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김정일을 ‘령도자’로 지칭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령도자’에 붙는 ‘최고’또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수령’과 ‘령도자’간의 차별성은 특히 영어 번역에서 모호해진다.

1997년 10월 김일성 사망 3년 3개월만에 김정일이 그의 부친의 사망과 동시에 공식이 된 두 개의 고위 직책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계승한 방식은 얼마만큼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정치체계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조선로동당 규약을 무시하고 북한정권은 1997년 10월 9일 방송된 ‘특별보도’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9개 도 당위원회와 3개의 시 당위원회 및 주요 정부기구와 조선인민군의 대표가 모인 일련의 집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의해 김정일이 그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의 1면과 2면에 걸친 특별보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것이었다.⁴⁷⁾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직 취임과 더불어 각종 사설과 연설에서 그를 찬양하는 횡수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의 1999년 1월 1일자 공동 사설에서 김정일은 27회, 김일성은 11회가 언급됨으로써 2.5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⁴⁸⁾

하지만 이것은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아버지를 대신했다든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의 정통성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그들은 당분간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중앙무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4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로동신문』, (1997.10.9).

48)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1.1).

(3) 군사의 강국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선차적 요소인 군사강국 건설도 동일한 비중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에서 김정일이 국가주석 대신 국방위원장을 선택한 점,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최고 통치기관으로 격상되었으되 위원들 대부분이 군부 인사들이라는 점, 군부 인사들의 서열이 현저하게 높아진 점 등이 그 후속 작업이다.

물론, 헌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개정 헌법 제111조),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 총리이다.(제120조) 김정일이 재 추대된 국방위원장은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제102조) 권한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제9기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맡았던 양형섭은 개회사에서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남도 김정일 추대 연설에서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국방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것임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국방위원장 직책이 말 그대로 국방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의로 해석되어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의 조직 영도자로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위원들의 대부분은 국정전반을 관장한다는 언급과는 달리 과거 5명에서 9명으로 증가된 위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군부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연형묵·김철만·전병호등 3명만이 민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조명록·이을설·김일철·이용무 등이 주석단에서 7~10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인사 부분에서도 군부인사들의 약진이 엿보인다. 이밖에도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중앙위의 정치국 정위원 및 후보위원의 사망으로 인한 꺾석을 메우는 충원 작업이 새롭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도 역시 군부출신 인사들이 상당 정도 충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군사 중시는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북한 지도부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위기관리체제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을 지도자의 무기력과 무력의 효율적 통제 불능에서

찾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군부의 위상이 일반 정상 국가보다 높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대 국가에서 전시 상태나 쿠데타에 의한 군정을 제외하면 국방 책임자의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인 통치 방법으로는 경제난을 비롯해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영 국가식의 통치를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지도부를 목숨을 걸고 보위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소위 선군정치론이고 총대철학이다.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임명된 후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수뇌부와 당·군의 핵심 간부들은 큰 변화가 없다. 그만큼 북한 핵심 간부층은 안정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두드러진 현상은 권력 구조의 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방위원장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상당부분 이양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석을 대신해 국방위원장을 사실상 국가 최고 직책으로 격상시켰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장 추대 연설에 나선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고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규정상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일 뿐이다.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의 면면도 모두 무력과 군수분야를 담당하는 간부들로 망라돼 있다.⁴⁹⁾

이를 통해 볼 때, 국방위원장이 폐지된 주석직을 대신해 국가 최고직책의 위상을 갖는 것은 헌법 규정과 상관없이 현실적 위상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국방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방위원장과는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방위원장은 국방을 포함해 전반적인 국가사업을 관장하지만,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무력과 군수분야로 한정된다는 의미다.

49)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부위원장 김일철(인민무력상),이용무 차수가 선출됐고, 위원에는 김영춘(총참모장) 차수, 연형묵(자강도당 책임비서), 이을설(호위총국장)원수, 백학립(사회안전상) 차수, 전병호(군수담당) 비서, 김철만(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차수가 임명됐다.

(4) 경제의 강국

사상·군사우선주의, 즉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바탕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대국 건설이다. 1998년 9월 17일자 『로동신문』, 『근로자』에 게재된 공동 논설은 향후의 경제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기본입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다. 이는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일성의 과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례적인 시정연설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없으리라는 그 동안의 추측을 불식시켰다. 물론, 이번 논설이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설의 주요 내용은 세계경제 일체화(세계화)가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 비판하고, 북한이 이를 비껴나간 것은 자신들이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노선을 관철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자립 경제라는 튼튼한 기둥에 받침 되지 않는 정치적 자주권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립경제가 확립되어야만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은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식의 처방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데 대한 원칙, ②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는데 대한 원칙을 ‘경제의 생명선’으로 고수하겠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노선, 경제보다는 정치 우선 논리를 계속 관철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초래된 헤지펀드의 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외자로 망한 경제를 외자도입으로 살려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대외 의존 사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세계화를 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라는 주장은 서방화·미국화 즉, 자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선진자본주의 ‘두뇌국가’들의 음모로서 경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북한 문건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문건도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외견상으로는 현재의 폐쇄체제를 고수할 것처럼 역설하면서도 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북한 지도부의 진정한 의도가 담겨져 있고 강조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 문건 자체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의 향후 경제정책 노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총론적 의미에서 기존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주장은 대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수사학적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무게 중심은 개혁·개방으로의 조심스런 진행, 즉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놓여져 있으며, 이것은 향후에 개혁·개방 추진시 중요한 인용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개정 헌법에서도 확인된다. 사적 소유 경제영역을 확대한 점(제20-24조), 수익성과 자율성을 경제운영의 원칙으로 추가한 점(제26, 28, 33조), 특수경제지대를 명문화한 점(제37조), 이를 통해 대외무역 강화 및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이 그러한 정책 방향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아울러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해 그 비중을 제고했고, 부서를 과감히 통폐합하면서 부서장들을 실질적인 기술관료들로 충원한 점, 부총리를 대폭 감원한 점, 상급기관으로 부작용이 더 많았던 중앙위원회를 폐지시킨 점 등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망을 강화해주는 근거가 된다. 즉, 향후 북한의 경제노선은 이른바 ‘북한식 시장경제 원리’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이 내딛어졌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구 소련·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정치적 다원주의(다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이나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 개방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 국가의 개혁 종착역이 체제 및 정권의 붕괴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정경분리 정책에 성공을 거둔 중국의 ‘개혁’사례나 베트남의 ‘개선’ 경험은 북한에게 여러 참조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선’조치를 경제개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꾸지 않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본격 가동하려면 우선 가격개혁에 착수해야 하는데, 기업관리에서 경제 지렛대 이용과 관련해 가격 측면을 중시하면서도 공산품 가격개혁에 착수하는 조짐은 아직 없다.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개인 상거래가 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개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수단 사유화라는 소유제 개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장·기업소·농장·기관·단체 등이 국가적 소유 혹은 협동적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농민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범위를 늘리고 소비품 생산 및 부업을 장려하며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고 있다. 분조관리제 개선의 방향이 어느 시기에 가서 중국의 가족생산청부제 수준으로 이르게 될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집단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한, 개인 영리활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 개혁을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호 연관된 측면을 지적해보면,

첫째, 남북대결 상황의 지속이다. 남북대결은 체제 경쟁적 측면을 안고 있고, 북한은 이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사회주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사상 정치대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평화적 이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개혁에 소극적이다.

둘째, 북한이 군사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언제나 전쟁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서 군수산업을 우선시키며 군수담당 책임기관인 제2경제위원회가 내각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기형성을 보이고 있다. 설비, 원자재,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갖는 군수 산업이 구축한 엄청난 지하 시설물은 전력·원자재난을 가속화시킨 주범이다. 1998년 9월 출범한 내각은 중공업 우선 발전을 주 과제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군수산업 우선주의를 견지했다.

셋째, 북한이 전면 대외개방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신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해안지역 대외개방 사례처럼, 전면개방에 나섰다가는 ‘자유화’ 물결이 북한 전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화교자본 유치로 경제개혁에 성공했듯이, 북한 역시 해외동포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가 미미하다. 결국, 북한이 한국자본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나 남북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고, 한국자본을 유입하더라도 체제존립을 위한 ‘제한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넷째,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의 노선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당·정·군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의 경제개혁에 대한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를 바탕으로 권력승계를 이룬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의 노선이나 언술을 뒤집을 수가 없다. 다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언술을 부분적으로 재해석하고 강조점을 이동시킴으로써 변화를 추진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3. 김정일 체제의 대외전략

1) 김정일 체제의 대남전략 : 특성과 변화

(1)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 기조

북한은 1964년 2월이래 3대(북한·남한·국제)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①사회주의체제의 유지와 ③남한의 적화통일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간주해 왔다. 1980년대 말 이후 지난 10년간 소련 및 동구의 체제변혁과 북한내 체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첫 번째의 목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것을 북한이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두 번째의 국가목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국가목표들에 대한 비중상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변화는 1988년 김일성의 신년사 중 ‘先 남북공존, 後 연방통일’이라는 주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체제 해체로 북한체제의 취약점이 노정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先 남북공존’ 주장)를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적 공존을 통해 성취하려 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작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듯 보였으나, 1993년 1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실시 결정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중단하였다.

김일성은 1993년 4월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여, 남조선혁명을 통한 하나의 조선 건설이라는 기존의 패권적 혁명전략에서 남북한간 ‘현상유지적 경쟁전략’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민족자주, 사대주의 및 민족허무주의 배격을 강조하여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북한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IAEA의 특별사찰 요구 등 국제적 압력을 받던 중, 1993년 3월 NPT를 탈퇴함으로써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미국(또는 미국이 대표하는 국제사회)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성취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은 대미관계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양보 받아내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결국 김정일은 핵문제를 계기로 체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1993년경부터 ‘통미봉

남(通美封南)'으로 요약되는 대남 및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는 바, 이것은 대미관계 개선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반면, 남한과는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관계를 고수하는 것이었다.⁵⁰⁾

(2)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 동향과 전망

1998년 9월 5일 북한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주석제의 폐지를 포함한 정부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을 실행했다. 이는 북한이 1994년 7월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비상관리체제를 최종적으로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북한은 내외 경제·사회환경의 악화로 인해 정부기구와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호소하면서 '준전시체제'로 위기극복을 꾀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한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하루만에 끝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의 '축배' 분위기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1995, 96년에 발생한 대규모 수재가 북한경제에 가져다 준 1차적 영향이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식량난을 포함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2년 남짓한 기간을 통해 북한 경제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에 적응되었다.

둘째, IMF사태를 맞으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는 바람에 북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IMF관리체제는 대북 협상력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와 북한의 흡수통일 두려움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보수주의, 조건부 지원을 표명하는 자유주의, 전면지원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여론이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대체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또는 신중성에 대한 요

50)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함께 1996년 4월 한·미 정상들에 의한 「4자회담」제 의는 한반도문제가 국제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이같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通美封南」을 통한 남한 배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음.

청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개방경제체제의 약점을 노출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대외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 지도부는 지금까지 개방과 외자도입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자위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이 자주적으로 경제개방 방식을 선택할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구실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북한도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내외정세에 대한 새로운 판단은 북한 지도부의 대외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만약 한국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IMF 이전의 사고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98년 4월에 북경에서 열렸던 남북한 비료회담이 결렬된 것은 바로 북한이 경제사정 때문에 비료를 얻기 위해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그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확실히 ‘흡수통일’ 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으며, 동시에 IMF시대에 한국도 그러한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며 심지어 과거와는 달리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두가지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까지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 지속, 경제적 불안정 요인 점증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대체로 약화되는 추세에 처해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정, 즉 통제된 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적 지원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김일성 사망 이후 각종 상징조작과 사상사업의 강화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強盛大國’론을 새롭게 주창,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코자 노력하는 등 정치적 정당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와 관련, 군사력 증대정책 및 군부 우대정책의 지속을 통해 군사문화의 확산을 통한 ‘전사회의 군사화’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 지도부는 이중적인 정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대내외 상황변화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세관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도 ‘경제건설’이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역사적인 해’로 강조하였으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 추대에 즈음해 ‘강성대국’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향후 북한은 과거보다 현실 타협적 정책을 보다 많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IMF사태로 남한 ‘혁명역량’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북한 및 국제 ‘혁명역량’의 약화 추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남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보다 상대적으로 유화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敵對的 공존에서 柔化的 공존으로의 전술적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위의 두 가지 위협은 북한이 1998년 상반기에 보여준 대남전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남북당국대표회담’(1998.4.11~17.북경)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8·15통일대축전’과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1998.6.22, 7.12)을 병행함으로써 대화와 전복의 이중 전략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정책 변화는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변화로 성격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당분간 이같은 전술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⁵¹⁾



(3) 남북 대화 : 양자적 차원과 다자적 차원

남북관계는 다음의 두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① 그동안 북한이 남북한간의 적당한 대립과 긴장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위기의식을 대내적 주민단결과 통합에 활용해왔다는 점(적대적 의존관계의 내부정치에의 활용)과 ②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방식이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남북관계가 선택적이며 통제된 교류형태를 띠면 북한정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일 것이지만 전면적이고 자유왕래식이 되면 정권에 커다란 동요가 올 가능성이 높다)이 그것이다.⁵²⁾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곧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할 남북한간의 적당한 긴장 유지나 선택적이며 통제된 관계개선 방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51) 김성철(1998),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pp.16~23.

52) 이서향(1998),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의 재정립”,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pp.105~131.

현재 북·미 회담 타결을 계기로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관계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으나 남북관계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오히려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 1999년에는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위에서 설명한 요인들 때문에 급진적인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전면 교류와 같은 획기적 진전(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을 이룩하지 않는 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어느 쪽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경제 관계의 확장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관계개선 방식에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① 양자적 차원⁵³⁾

당국 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북한은 1992년 기본합의서와 각종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분과위 및 공동위를 구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대두 이후 당국 대화는 전면 중지되었고, 핵협상 특사 교환 협의·정상회담 준비 접촉(1994), 쌀 협상(1995)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당국대표(차관급)회담’ (1998.4.11~17.북경)이 열렸다. 그러나 남한의 상호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인해 회담은 결렬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당국회담은 재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회의를 개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실질적 최고 직책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대외관계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1994년 북한측 최고 책임자의 유고 상황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이제 북한은 책임있는 입장을 언급해야 할 상황이다.

비당국 민간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먼저 경제부문에서 김대중정부는 ‘정경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4.30)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 (1998.6.22, 7.12)과 남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998년 상반기 남북교역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98년 상반기 남북 교역량은 7,800만 달러 정도로 작년 동기간 보다 46.5%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남한의 반입량은 67.0%, 반출량은 5.3% 각각 감소하였다. 북한과의 교역량이 감소한 것은 남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전체

53) 허문영(1998),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남정책 전망”, 『통일경제』11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44~46.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북한내 위탁 가공과 북한산 원자재 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경협사업은 김대중정부의 정경분리 원칙 및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 시행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화해와 신뢰구축, 나아가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의 정경분리 정책과 북한의 정경분리 정책이 합주를 연주하게 되면,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국면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북지원의 경우 김대중정부는 3월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8월말까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총 2,053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회·문화 부문에서 남한은 자유화 바람 유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남북 상호간의 필요로 인해 비록 선별적이지만 학술·문예·예술·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방북과 북한 고려성균관의 자매결연('98.4.28~5.5), 리틀엔젤스단의 평양공연('98.5.2~12), 각종 종교인들의 방북, 여러 언론기관(중앙·경향·동아일보)의 유적취재('98.7~9월) 그리고 연변 과기대와 나진 과기대 설립('98.6.5), 한민족복지재단의 나진 로템제약회사 설립 및 선봉군인민병원 현대화('98.6.5)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8·15통일대축전' 행사를 놓고 남한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구성하자 북한은 한총련 및 범민련이 제외된 점을 비난하고 8·15공동 행사를 무산시켰다. 이는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아직도 처해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 조치에 힘입어 靜中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생사 확인의 경우 1998년 8월말 현재 219건이 성사되어 지난해 전체 건수인 164건을 초과하였다. 이산 가족의 상보 또한 46건 성사되어 1997년 24건보다 증가하였다.

② 다자적 차원⁵⁴⁾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남북한의 양자적 대화와 협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불신과 대립이 심각할 경우, 3자 이상의 국가

54) 허문영(1998), 전계서, pp.46~51.

나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완충적 역할을 감당할 때 새로운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불신이 심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근원적으로 미·일·중·러의 이해 관계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남북 문제로만 환원시킬 때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아무튼 현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다자적 접근방식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4자회담도 평화체제 관련 다자회담으로 볼 수 있다.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북한에게 1,000MW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북한이 다자적 틀 속에서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협력하는 시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KEDO 틀 내에서 남북한은 공식 및 비공식 창구를 통해 타협하였고, 북한 땅에서 남북한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수로 건설이라는 구체적 사업을 통해 상호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신뢰형성·긴장완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비용분담 문제는 KEDO 집행이사회('98.7)에서 한국이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본이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원을 확보하도록 일단 합의되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다. 미국은 중유 비용을 담당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비용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영변에 건설 중인 지하시설이 핵개발 시설일 수 있다는 의혹과 1998년 8월 31일 발사된 인공위성으로 입증된 미사일 개발능력으로 인해 미의회는 경수로 관련 대북 예산지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결의안('98.10.15)을 통과시켰고, 미행정부는 지하시설 투명성 확보가 필수요건('98.11.10)임을 천명하였다.

4자회담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함께 협상·보장하는 다자적 접근 방식이다. 4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와 민족화(남북한 당사자 원칙)를 균형적으로 풀어나가는 중대한 실험 사례라 할 수 있다. 4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의제와 관련국 역할분담 문제였다.

예컨대, 한·미는 '先 분과위구성, 後 의제선정' 입장을, 북한은 '先 의제선정(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평화협정), 後 분과위구성'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난 제3차 본회담('98.10.21~24)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로 2개 분과위 구성에 4국은 합의하였다. 북한이 분과위 구성에 응하였던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 때문이다. 경제난 해소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미관계와 대남관계를 제한적이거나 개선함으로써 자본·기술의 도입과 대외경

제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킬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 내에는 경수로 사업 및 대북 중유공급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과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 결과, 이를 완화시키지 못할 경우 북미관계는 다시 1993년의 대결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제한적 우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나타나듯이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김정일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임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 및 중국의 대북 회유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북미 고위급회담('98.8.25~9.5 뉴욕)을 통해 북한에 중유 공급과 경수로 사업을 예정대로 진전시킬 것과 점진적 경제 제재 완화 그리고 30만 톤의 식량 제공을 약속하였다. 중국 또한 한동안 중지되던 원유 및 식량원조를 재개하였다. 이에 북한은 지하 핵시설 의혹 해명과 미사일회담 재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봉 봉인작업 허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북한은 4자회담의 급속한 진전을 거부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갖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 과 '주한미군철폐' 주장은 북한이 4자회담을 결렬시키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의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때 4자회담에 참여할 것이나 불리하게 될 때에는 이 주장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불참할 것이다. 아무튼 4자회담은 그 장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의를 제외한 유일한 대화창구라는 점에서 현실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일종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2) 김정일 체제의 대미 및 대중 전략

(1) 김정일 체제의 대미정책과 북미관계⁵⁵⁾

북한이 그간 추진해온 대미관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이(우리보다) 협상은 한번 잘한다"는 자조적인 세간의 평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음직하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협상의 성과는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으로 대표된다. 실제로 이 합의문은 북한의 핵동결과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하는 경수로와 중유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 공

55) 김영목(1998), "북한의 대미관계 전략", 『통일경제』 11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30~37.

식관계가 조만간 수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본다면, 북한의 대미협상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 ‘朝·美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이 두 요구는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 상태를 북한에 유리하게 변동시켜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조·미 관계 정상화’는 한국이 구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세적이고 소박한 목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 요구를 ‘朝·美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일체화하여 분석해 볼 때에는 북한의 의도가 훨씬 전략적이고 공세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의 ‘深謀遠慮’한 전략-북한식 통일-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포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 교전 상태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으니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결코 수세적인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남북대화 요구, 특히 남북 당사자간 해결 주장에 대해 흔히 이러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즉, “민족 내부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하며, 남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민족외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외적인 문제는 휴전체제와 외군 무력에 관한 것이고, 민족내부의 문제는 남북간 화해와 단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화해가 되려면 먼저 남측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파기해야 하며, 이러한 화해가 전제되어야만 남북간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외세 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민족끼리 대동단결하자고 나올 때, 남북간 대화와 합작(고려연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⁶⁾

달리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간섭치 말거나 한국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북측과

56) 북한은 1998년 4월 18일 김정일 서한과 김정일의 민족 단결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5월 19일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였다.

합작·연대를 하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며 또 일관된 목표인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고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최대한 넓은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매우 고전적인 전략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대미전략과 대남전략을 반드시 한 맥락에서 짚어보아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은 모든 대외협상에 있어 실질적인 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관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대외관계의 목표가 경제적인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질 정도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

북한의 입장에서만 볼 때는 핵문제를 일으켜서 1,0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 연간 중유 50만 톤의 급부를 보장받았다. 또 미사일 수출중단 요구에 대해 수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연간 수십만 톤의 식량을 국제 사회로부터 받아오고 있다.⁵⁷⁾

북한이 모든 대외 접촉과 거래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급부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對 남한·미국·서방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북한의 경제적 동기가 대외관계에서의 순수한 목표라면, 북한은 우리와의 공식대화 재개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일본과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관계 정상화 교섭을 촉진시키는 것이 보다 정상적인 행동인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순리의 코스를 밟지 않거나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보다 큰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도 북한이 이러한 전략목표를 계속 갖고 있다는 심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전반적인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정’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 국내 일부에서 ‘한반도 안정’을 앞세우는 미국의 입장을 보고,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목표와 현실적 정책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57) 미국은 잉여밀의 공급 약속외에 WFP의 4차에 걸친 호소에 호응(1차:200만 달러, 2차:717만 달러, 3차:약 177만 톤, 4차:50만 톤)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수차 한국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밝혀왔다. “비핵화를 수반하는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통일된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증진할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략적 목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 견해이다.⁵⁸⁾

다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또 동북아의 안정이 급격히 파괴되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은 어느 전략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명제’와 같은 것이다. 미국정부가 관여정책 또는 확대정책을 한반도 정책의 기초로서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간에 공식 관계 수립은 물론 이미 약속한 연락사무소도 개설이 안되고, ‘제재 해제’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이유는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의 균형’이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안정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진정한 안정은 당사자간에 정치적·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고, ‘비핵확산’, ‘대량 살상무기 포기’ 등 국제적인 규범들이 당사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초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당사자와 지역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 의미의 안정은 도모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 조야 일부에서는 단순히 북미관계의 진전속도를 늦추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관여정책 자체를 수정하라는 강경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약속한 ‘제재 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표시하고 비난도 해왔다.

북한은 1998년에 들어와서는 불만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제재 해제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미 관계에 대해 근본적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걸쳐 밝힌 바 있다. ‘핵동결 파기’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공개적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양자 관계는 진전보다는 대결의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여러 보상문제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의외로 북한이 적극적 협조 자세를 보인

58) 미국 정부는 1998년 11월 「21세기에 대비한 美 국가전략보고서」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미국의 전략 이익에 부합되며, 미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것이다. 북한과 미국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 즉 본격적 해빙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도박적 협상방식을 버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한국, 일본 등 우방들에 대해 수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⁵⁹⁾

미국외교협회의 한국특별팀에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유수한 전직 관리와 학자들이 초당파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하시설 문제로 미 국내가 떠들썩해진 분위기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서한을 채택했다. 서한의 골자는 현재의 북미합의문 구도, 즉 북한에 대한 관여는 계속되어야 하되, 북한의 핵동결 의무가 확인되어야 하고 미사일 수출·개발 중단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채찍과 보다 큰 당근’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999년 1월 16일 제네바 북·미 3차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즉 북한이 금창리, 미사일, 미군유해 등에 협조할 때 평양·워싱턴간 정치·경제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先금창리 後일괄타결’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반면 북한은 모든 문제를 한 묶음으로 해결하는 보따리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초반에 회담을 결렬시킨 몇 개월 후 재개할 공산이 크다. 회담후의 평화적 시나리오는 패키지 도출에 성공→금창리 접근→경제제재 단계적 해제→연락사무소 개설→남북경협 확대다. 그러나 북한은 좀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면마다 벼랑끝 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김정일 체제의 대중정책과 북중관계⁶⁰⁾

북한의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중국을 미국으로부터의 위협 해소와 경제난관 타개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과 중국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현황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자신들의 전략

59) 최근 美 공화당계 보수 인사들은 북한이 일으키는 문제에 보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침략 의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60) 한홍석(1998), “북중관계와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통일경제』11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38~43.

적 이익 증진을 위해 북·중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진영에 완전히 합류한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억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다. 북한은 경제 구조적으로 원유, 식량, 유엔탄 및 부분적인 기계·군사장비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과 원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는 공식통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 변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북한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따리 장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북한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비료지원과 같은 남한의 원조에도 조건이 따른다고 거절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만만큼 억지를 부릴 만큼 자존심을 낮추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식의 하나가 바로 ‘피로 맺어진 우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의 정치적인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주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성과를 찬양했지만 중국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경제 우선 주의와 이기주의 등 ‘자본주의 현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북한사회의 분위기에서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중국처럼 개혁의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4개 현대화라는 중국 지상과제의 실현에 도움이 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소한 ‘교차 승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1992년에 한국과의 수교를 단행했다. 지금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및 일본과의 교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중 수교라는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을 것이 뻔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무역을 적극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양국간의 무역이 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수출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80년대 초부터 상대적으로 비교적 발전 잠재력이 있는 변경무역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관세감면과 같은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는 변경무역을 포

함한 북한과의 무역이 중국경제(특히, 변경 지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중국이 남북한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나 상대방을 ‘흡수통일’하는 사태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임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우선 북한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방법 이외에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남한을 ‘흡수통일’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중국은 ‘피로 맺어진 우호국가’이던 베트남이 통일 후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역시 중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사회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흡수통일’ 발생시 감정적으로 남한에 적대감을 품은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대거 중국에 유입될 것인데, 이는 중국에 막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부담이 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계속 투입될 것을 바라는 중국은 ‘흡수통일’로 인해 한국의 국력이 소진되어 대 중국 투자와 무역이 격감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남북이 교착되어 있는 긴장 상태가 중국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남북한도 중국처럼 ‘1국2체제’식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추진하는 ‘실험의 동맹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이다. 중국 지도부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북한 조기 붕괴설’을 전혀 믿지 않아 왔으며 심지어 믿지 않고 싶어할 정도이다. 중국이 보기에 북한은 구 동독이나 루마니아와는 전혀 다른 역사와 체제 구심력이 있으며, 외부의 압력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욱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회복과 중국 경제력의 증대는 북·중 관계 확대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으로, 북한은 외부의 압력에서가 아닌 ‘자주적’인 개방자세를 취해 경제난관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이미 금강산 개발과정에서 초보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하며 자기식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중국에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세는 물론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조를 제공해준 중국에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중국도 환영할 것이다.

IV. 김정일 체제의 위기구조와 안정성 분석

1. 김정일 체제의 위기구조와 대응방식

1) 위기구조

(1) 경제위기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가 직면한 위기의 일차적인 근원은 경제난 심화에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계속적으로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12월 9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회의에서 1987~1993년의 제3차 7개년 계획이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방위력 강화”로 인해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하고, 2~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라는 3대 제일주의 관철 및 석탄·전력·철도운수·금속공업발전 등을 추진하였으나,⁶¹⁾ 1998년 현재까지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995년 북한의 GNP는 남한의 1/20인 223억 달러, 1인당 GNP는 1/10인 957달러로 추산되며,⁶²⁾ 1990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994년의 경우 다소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1995년과 1996년의 수재에 따른 곡물생산 감소와 사회 기반시설 낙후 등으로 다시 악화되어 7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71-75	1976-80	1981-85	1986-9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0.4	4.1	3.7	1.4	-3.7	-5.2	-7.6	-4.3	-1.7	-4.6	-3.0

자료: 「内外通信」, 제1054호(1997.4.24).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식량난이며, 이는 체제위기의 결정적인 변수이다. 북한의 곡물생산은 비효율적인 협동농장 제도, 영농 장비와 기술의 낙후, 열악한 자연환경, 농산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미숙

61)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 수행정형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로동신문』, (1993.12.9).

62) 韓國銀行(1996.6), 『1995년~北韓 GNP 推定結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간 650~680만톤 정도로 추정되나, 실질 생산량은 1991년 443만톤, 1992년 427만톤, 1993년 388만톤, 1994년 413만톤, 1995년 345만톤, 1996년에는 369만톤으로 매년 약 200만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91년 129만톤, 1992년 83만톤, 1993년 109만톤을 수입하였으나, 외화부족으로 1994년부터는 50만톤 이하로 감소하였고, 부족 분을 외부로부터의 식량원조로 충당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공급 상태 (단위:백만톤)

년도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생 산 량	4.43	4.27	3.88	4.13	3.45	3.69
수 입 량	1.29	0.83	1.09	0.49	0.96	1.07
총공급량	5.72	5.10	4.97	4.62	4.41	4.76

자료: 「内外通信」, 제1054호(1997.4.24).

1995년과 1996년 여름의 수재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는 1997년 2월 3일, 1996년 말 식량재고는 24만 6천톤이며, 연간 곡물수요는 784만톤으로 이중 식량으로 필요한 양은 482만톤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다.⁶³⁾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결국 1997년 신년공동 사설에 나타난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으로 대변된다.⁶⁴⁾ 더욱이 김정일은 1996년 12월 비공식 연설을 통해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은 식량문제로 인해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⁶⁵⁾

이러한 식량난과 함께 생필품 부족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생산 원자재 공급 역시 심각한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탄생산 및 원유도입량의 대폭 감소 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공장가동률은 30%미만인 것으로 평가된다.

63) 『東亞日報』, (1997.2.4).

64)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65) 『조선일보』, (1997.3.20), 『중앙일보』, (1997.3.20).

이와 함께 1995년 현재 북한의 외채 총액은 약 118억 3천만달러로 추정되고, 북한의 총외채 대비 GNP 비율은 50%가 넘고 있어서,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채에 대한 수출비율은 1,6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대외신용도는 세계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하고, 이는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외부로부터의 자문과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도 1990년대에 들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5억 달러로 1994년도는 21.1억 달러에 비해 2.7% 감소하였다.

한편 19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1996년 중반까지 49개 대상에 3억 5천만달러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22건이 계약 이행단계에 들어가 3천 4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외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투자 실행율 역시 9.7%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⁶⁶⁾

(2) 정당성의 위기

이러한 경제위기와 함께 김정일 체제는 업적 부족으로 인해 정통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은 봉건적 정치문화로 인해 수용되는 측면이 있고, 권력승계과정에서 권력투쟁의 발생이라는 리더쉽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았다.⁶⁷⁾

그러나 김정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한 점에 있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지 않는 독특한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으로 계승 또는 전이될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정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등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각종 정치적 상징조작을 활용하여 카리스마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⁶⁸⁾ 주체사상의 논리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사상통제와 인민생활 향상

66) 『内外通信』, 第1054號, (1997.4.24).

67) 全賢俊(1994). 『金正日 리더쉽 研究』, 민족통일연구원, p.33.

68)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바 있으며, 동년 9월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된데 이어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은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기 시작하였을 뿐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제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그 결과가 북한 체제의 총체적 위기로 귀착됨으로써 카리스마 및 치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이 지나치게 카리스마화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김정일은 모든 측면에서 왜소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서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 비해 정통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통성 위기는 심화될 경우 리더쉽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는 북한에게 이데올로기 위기의 가능성과 함께 국제적 고립이라는 위기를 산출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①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②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③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로 규정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⁶⁹⁾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이데올로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대외차원에서 김정일 체제가 당면한 위기는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심화와 함께 남한과의 국력 격차가 커짐에 따라 남한에게 흡수당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대외차원에서 김정일 체제의 핵심과제는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배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이라는 체제위기의 근원과 함께 정통성 문제 등 북한이 처한 위기상황의 구체적 표출은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현상과 함께 1997년 2월 황장엽 당비서의 망명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 증가현상과 관련하여 1997년 현재 해외체류 탈북자는 1천~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자는 1990~1993년 24명이었으나, 김일성 사후 급증하여 1994년 52명, 1995년 40명, 1996년 51명, 1997년 8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⁷⁰⁾ 1997년 5월 12일에는 북한주민 두 가족 14명이 선박을 이용하여 서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황장엽의 망명은 김정일 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과 함께 북한 권력핵심부의 동요를 표출하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6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70) 동용승, “탈북자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 『삼성경제』, 통권 제57호(1997.2), p.130 ; 『內外新聞』 第1068號(1997.10.9).

한편 북한 내부적으로는 각종 조직 및 사상교양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심화, 특히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기대수준의 상승과 좌절’이라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편, 외부정보 유입에 따라 주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체제비판 의식 또는 반 김정일 정서가 점증하고 있고, 암시장 등 불법적인 사적 경제부문이 확장되는가 하면,⁷¹⁾ 뇌물수수행위, 물질주의의 확산과 절도행위 등 사회적 일탈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상학습 및 조직생활 이완, 노동규율 위반, 형식주의적 ‘사업작품’이 만연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식량폭동 등 비조직적인 저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일 체제가 제도, 사회, 국민사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나,⁷²⁾ 사회통제의 효율성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된다.

2) 대응방식 : 인공위성 발사와 핵개발 카드⁷³⁾

북한은 제네바핵합의를 어기고 원폭을 개발중인가. 북한이 최근 원폭 방아쇠 장치에 해당하는 고성능 폭탄렌즈 실험을 했다는 미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는 1999년 3월 ‘한반도 위기설’로 증폭됐다. 그러나 북은 가짜 핵시설로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미 북한통의 분석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북에 대한 핵사찰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핵개발 위협’을 가하며 미·일 상대로 대도박을 벌이고 있는 김정일의 속셈은 무엇인가.

외자도입계획도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소 5백 마리를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김정일과 금강산 관광 및 석유개발을 포함한 9개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총 9억4백만 달러를 받게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9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앞서서 1년치 수출액을 고스란히 손에 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을 자신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4년 10

71) 북한 GNP의 15%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 (1997.4.25).

72) 최완규(1996), 『북한은 어디로』, 경남대학교 출판부, pp.389~398.

73) 최원기, “핵개발, 국방용인가 대미협상 카드인가”, 『월간중앙』, (1999.1), pp.14~20.

월 제네바 핵합의를 대표적인 외교 실패 케이스로 인식하고 있다, 즉 김영삼대통령이 해결하지도 못할 일에 괜히 끼었다가 40억 달러 상당의 경수로 덤터기만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문제를 이슈별로 교통정리 해놓고 있다. 핵문제는 철저하게 미국의 손에 맡겨놓고 자신은 햇볕정책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98년 10월말 CIA의 테넷 국장을 서울에 파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한·미간에 갈등의 조짐마저 낳고 있다. 미국 외교관들은 사석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핵문제에 몸을 사린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미간 역할이 뒤바뀐 데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주로 대북 강경노선을 취했고 미국은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역할분담이 뒤바뀌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 서울은 좋은 사람(Good Guy)역할을 하고 있으며 워싱턴이 나쁜 사람(Bad Guy)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노동당 1호청사(김정일 집무실)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유무형의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정치적 해결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을 빌미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 문제는 북·미 협상→핵사찰 허용→경제제재 해제→남북 정상회담→북·미 외교관계 수립→북·일 관계 정상화→경제개혁의 밑그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원폭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경우다. 특히 강성대국을 자신의 국가이념으로 설정한 김정일이 원폭을 국가 붕괴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고 1999년 또는 2000년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도박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평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북한의 개혁, 개방이 가시화 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주춧돌을 놓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찬사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북한의 원폭 개발로 이어질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진정한 안보위협에 눈감고 조기경계 발동을 소홀히 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 요인⁷⁴⁾

1) 대내적 요인

첫째,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와 유입되는 정보의 여과장치, 감시동원체계 등 제반 사회통제 기제들의 작동수준과 그 변화 양상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재 이러한 기제들의 기능이 과거보다 약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은 북한사회를 통제할 만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유입되는 정보를 부분적으로 왜곡시키고 지도부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정보여과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사상교양·학습체계를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정보 여과장치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회통제 기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들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가 더 개방적인 사회로 이행한다면 사회통제 기제들이 해체 혹은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것은 정권안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여전히 완고하게 현재의 유일체제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계속 정권 안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통제는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권력집단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서 볼 때 현재 수준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그를 보좌하는 지도집단의 그에 대한 충성심과 응집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하다.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의 혁명 2세대를 중핵으로 하여 혁명 1세대, 한국전쟁 유자녀 출신, 3대 혁명소조원 출신, 실무형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정일의 보좌집단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에 대해서도 아직은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이 충성심의 균열 여부는 앞으로 김정일의 지도력 수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상황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74) 김정일의 노작 발표 20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계응태의 보고문, 『로동신문』, (1994.8.28).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경제가 1980년대 말부터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경제야말로 현재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최근 중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현재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북·미회담 타결로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부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승되어 있다.

주민의 정권(혹은 지도자) 순응 정도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 현정권을 김일성 시대처럼 지지하는 분위기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해 광범하게 불만이 퍼져 있거나 조직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징후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북한에는 현재 김일성의 뒤를 이을 인물로 김정일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다수가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별 무리 없이 새로운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지도력은 효과의 시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권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정권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그가 후계자 시절 발휘했던 조직관리 능력이나 선전선동력, 그리고 북·미회담 타결 솜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의 지도력 때문에 정권이 동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미회담 타결로 현재 북한사회에서 김정일의 지도력이 높이 평가·선전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도력의 일종인 김정일의 체제전환 능력이 특별히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수령’을 ‘기수’로 하는 유일체제의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해서 김정일이 집단지도나 권력분산 등을 수반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로 유일체제를 전환시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정권 안정성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이 체제전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북한경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사회 저변에 확산된 다원화 경향이 유일체제의 일원성과 마찰을 일으켜 김정일 정권을 동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같은 유일체제 아래서는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정권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정일의 건강이 중요 변수가 되는 것은 수령의 절대권력이 보장되어 있는 유일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 체제는 최고지도자의 유고시 체제불안을 나타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유일체제가 권력교체 과정에서 체제의 연속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수령’을 보좌하며 지도자 수업을 받아온 후계자의 존재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에 김정일이라는 20년간 준비되어온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사회는 체제의 안정적 연속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처 새로운 후계자가 선정되기 전이나 혹은 새로운 후계자가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전에 ‘수령’이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실례로 김정일이 ‘수령’이 되고 또 다른 후계자의 등장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김정일이 건강이상으로 유고가 된다면 이 체제는 구심력의 정점이 공동화되면서 엄청난 체제 동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2) 대외적 요인

첫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은 북핵문제에서도 유엔을 통해 대북한 제재조치를 강행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결정적인 제동을 건 바 있다. 현재 중국외교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북한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① ‘사회주의 북한’의 붕괴가 곧바로 중국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② 한반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대가로 중국은 북한에게 북한 위기의 처방책으로 더 폭넓고 조속한 경제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의 승인과 지원을 약속했으며 석유원조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미국, 일본 등 서방의 북한 봉쇄정책은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의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북한의 전통적인 피포위의식(被包圍意識: 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들에 포위되어 있다는 의식)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북·미회담 타결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의 정책이 포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즉 북·미회담 타결을 계기로 북한을 압박해 왔던 대외적 압력이 역으로 협력과 지원으로 바뀌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북·미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경쟁과 협력지향’이라는 새로운 정세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김정일 체제의 전망

1) 단기전망

(1) 권력엘리트의 역학관계

김일성 사후 권력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4년 7월 20일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두리에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8월 27일 “간부대열의 로·중·청을 옹계 배합”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⁷⁵⁾ 이러한 ‘간부배합’ 정책은 김정일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사망한 김일성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유훈통치라는 명목에 따른 기존정책의 지속 추진이라는 맥락에 있는 것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2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라는 논문을 통해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 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업적을 옹호 고수하며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⁷⁶⁾고 강조하여 원로집단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부배합 및 원로우대정책은 커다란 변동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상 김정일을 정점으로 김영주·박성철·양형섭·김용순·장성택 등의 친·인척과 항일 빨치산 유자녀로 학교 동문인 김국태·최용해·김환 등이 권력 핵심부를 계속 장악하는 족벌정치의 특징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 사후 1995년 2월 권력서열 3위였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의 사망이 외에도 김봉률(인민무력부부장, 차수), 김용순(전IOC위원), 이화선(당 조직부 부부장), 강희원(부총리), 박중국(인민무력부 부부장), 주도일(당 군사위원·차수) 등 50여명의 주요 인물들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권력구조는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년 2월 황장엽 당비서의 망명에 이어 최광, 김광진의 사망에 따라 북한의 권력 재편은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김정일 체제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김정일 유일체제와 군부통치체제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의 권력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군부의 위상강화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은 현재 군부에 의존하여 통치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권력서열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원로들은 예우차원에서 자리만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75) 김정일의 노작 발표 20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계응태의 보고문, 『로동신문』, (1994.8.28).

76) 『로동신문』, (1995.12.25).

다. 황장엽의 망명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이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군부가 김정일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조종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평가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김정일의 군사우위정책에 대해 군부 핵심인사들은 각종 대회를 통해 “김정일을 위해 총폭탄이 될 것”임을 맹세함으로써 김정일에 대해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특히 1997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세상 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준엄한 역경이 닥쳐 온 다해도 추호의 동요없이 불변의 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만을 충직하게 받들며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안고 혁명의 제1선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⁷⁷⁾ 이와 함께 김정일은 철저한 감시첩보망을 조직하여 군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와 간부과를 통해 군부의 모든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한편, 고위장성들의 활동상황을 일일 보고하는 총참모부 산하 작전국, 장성급 이상의 지휘관을 감시하고 6개월 단위로 보고하는 총정치국 조직부 산하 당생활지도과·정보과, 그리고 장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보고하는 보위사령부 등 4개의 감시조직과 조직지도부를 연결해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⁸⁾

따라서 현재 김정일은 정권유지의 핵심변수인 군부를 확고히 장악한 동시에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부나 그 군사력에 대한 통솔권을 잃거나 혹은 군사력을 효과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잃기까지는 혁명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브린튼(Crane Brinton)의 증언을 적용하면 북한체제의 존속은 가능한 것이다.⁷⁹⁾

또한 북한의 권력구조는 핵심 권력엘리트의 중점적 지위 보유와 각종 감시기구의 효율적 작동 등으로 반 김정일 세력의 조직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내에는 김정일을 대체할 인물 또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정일 정권은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7) 고유한(1997), 전계서, p.66.

78) 정규섭(1998), “김정일체제의 위기구조와 안정성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pp.54~58.

79) C. 브린튼 著, 崔明官 譯, (1978), 『革命的解剖』, 서울;三中堂, p.142.

(2) 아래로부터의 저항문제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 현황에 비추어 정권의 안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되나, 김정일 체제 자체의 존립여부는 권력엘리트 내부분제임과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지지 또는 저항과 연계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김정일 체제의 위기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및 이에 따른 여행통제 와해, 관료부패에 대한 주민불만 증대, 외부정보 유입 등으로 사회적 응집력 약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과도한 군수산업 비중, 만성적인 물자부족, 기술 및 설비낙후 등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단기일 내 경제가 자력에 의해 회생될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경제난 심화와 사회적 결속력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산발적 시위 등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계속적인 가치 박탈에 따른 대중의 불만 증대가 정치권력의 존립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로부터의 봉기 또는 혁명발발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핵심세력의 형성과 조직화된 대항세력으로의 성장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기일 내 이러한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발적 시위가 미비한 정보·통신망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치·사회적 통제장치의 가동에 의해 반 김정일 세력이 조직화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소규모 정치적 저항사태는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사태와 유사하게 김정일에 충성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쉽사리 진압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현재 존슨(Chalmers Johnson)이 언급한 더 큰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사회통합이 유지되는 권력의 수축 또는 나아가 권위의 상실이라는 상태에 직면하고는 있다고 평가되나, 통제수단의 마비라는 체제 존립의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⁸⁰⁾

80) 존슨(Chalmers Johnson)은 혁명의 원인을 사회체제의 균형상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존슨에 의하면 첫째, 사회체제가 평형을 상실함으로써 조장되는 여러 현상 가운데 집권자가 계속해서 더 큰 강제력을 행사하여만 사회통합이 유지되는 상태인 권력의 수축 현상은 혁명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지도층이 평형을 되찾을 능력이 없고 민중의 신뢰를 상실하면 권위의 상실 현상이 일어나며, 이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강제력을 사용하더라도 민중은 이를 더 이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권력수축과 권위의 상실이라는 상황에서도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하게 되면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 셋째, 이 두 조건이외에 군대의 반란, 패전, 혁명분자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 등 권력엘리트의 무능력을 노출하는 일련의 사건은 혁명을 유발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Chalmers Johnson,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Brown, 1966), pp.91~107. ; 고유한(1997), 전거서, p.68.에서 재인용.

2) 중·장기 전망

김정일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취약성을 노정하면서도 존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군부에 의존하여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국가전반에 걸쳐 김일성과 같은 권위와 카리스마를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군부의 입장이 중시되는 정책추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통치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김정일 유일체제는 김일성 유일체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저작을 발표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대내외 정책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애국애족의 입장 견지, 민족자주의 원칙 고양, 정치·경제 군사역량 강화,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제고,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반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 강화 등이다. 이 저작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수령에 대한 충효성을 강조하여 유일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민족 대단결을 명분으로 대남 통일전선전술을 적극 구사하려는 입장도 표명되어 있으나 개혁·개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김정일은 이 저작에서 국가사회제도의 관리와 사회생활 조직에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약탈과 예측의 울가미로 규정하는 동시에 세계의 일체화란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예측·동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한 점은 김정일 정권의 반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김정일 정권이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의 안전성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단기적인 안정과는 다른 불안정을 보일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김정일이 유일·폐쇄체제를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적극적인 외면하는 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존속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부분적인 대외 개방정책 추진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부정보의 유입·확산은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주민들의 체제개혁 요구의 증대와 불만 확산이 초래되어 소요 사태가 빈발하는 한편 핵심 권력층 내에서 김정일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가 고조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정일 정권의 정치변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미 권력 핵심을 장악한 군부의 일부세력이 김정일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소요사태의 전국적 확산, 유혈사태의 발생상황에서 권력 핵심세력이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체제붕괴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는 민중봉기의 확산과정에서 군부의 일부가 가담하여 대정부 물리력의 우세를 점하는 동시에 민중봉기의 확대·심화과정을 통해 기존 북한체제의 전환과 체제변혁이 초래되는 상황이다.



V. 결론

결론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정책변화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북한문제를 국제정치 문제화하고 국제정치문제를 풀기 위해 군사적인 비상방법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어려움을 대외로 돌리고 증오와 경각심을 고취시켜 어려움을 참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을 극대화하여 이해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와 인도주의가 혼합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우선 적은 지출로 북한의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구사될 것이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게 행정책을 쓰는 것과 함께 미사일·화학무기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카드의 수와 가치를 끊임없이 늘리고 높여나가는 것이다. 또 분산된 국가의 역량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 집중시키고 절박한 분야의 개발에 힘을 넣는 것이다. 지방경제의 자립을 강요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산업시설을 대담하게 폐기시킴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화하였던 내각의 권능을 높여주어 경제관리의 능동성을 높이고 그 책임 또한 강화할 것이다. 외화 난 해결에 지도자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도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 적극화, 수출기업확대 등 경제의 대외지향적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난의 핵심인 외화 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꺼려왔던 관광사업을 확대한다던가, 예술·체육, 국제회의 유치 등 각종 문화이벤트를 통한 외화수입, 남북한 특수상황을 이용한 부수적 수입 등의 방법을 다양하고 적극화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들은 대외 및 대남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대단히 단적이고 편법적일 수밖에 없고 수익성 또한 높게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어차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한국을 볼모로 한 핵문제 해결에서 보았듯이, 일본을 볼모로 한 미사일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대일정책의 강온정책이 두드러질 것이다. 대남 문제에서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접적인 유연정책을 금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도 남한의 정경분리 정책을 이용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에 의한 이윤 극대화를 꾀할 것이라고 본다.

김정일 체제의 권력구조의 역학관계, 아래로부터의 저항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김정일 정권의 교체 또는 민중봉기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과 같은 상황이 야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김정일 체제가 지탱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체제외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변경은 전쟁발발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으로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변 4국은 모두 이러한 사태발생 과정에서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결국 김정일의 권력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주변국은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막기 위한 대북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정일의 말대로 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 또는 체제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 체제가 개혁·개방을 외면한 채 유일·폐쇄 체제를 고수한다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 회생과 궁극적인 체제존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유지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남북 화해·협력에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전반을 해결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핵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남도발을 카드화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국지전 도발 가능성과 함께 체제존속의 한계상황에서는 자멸을 각오한 대남 전면전을 자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함께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상정하면서 붕괴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시 통일비용에 대한 국제적 콘소시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 한반도의 전쟁 발발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러시아 등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전반은 새로운 차원에서 재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의 정책 변화가 강온의 양면성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남한이 이에 대응해 나갈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의 기본방향은 전쟁발발의 위협없이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평화적 통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와 주변 4강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지원·유도하는 데 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한반도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가 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면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의 개방 및 태도변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주변 4강국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은 대체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대북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우리는 북한의 개방 및 변화 유도를 위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꾸준한 포용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이들(4강국)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확고한 인식과 지원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안보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되도록 개편된 후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안보강화 기반위에서 대북 교류·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변 4강국간의 관계발전 양상이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4강국간의 관계가 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간과될 수 없다. 이 외에도 한반도 평화구축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자차원에서는 중국과 경제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는 실리명분 외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자차원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규범준수를 유도하고 아·태 및 동북아 질서의 편입을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의 북한 가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내에서 남북한 협력·신뢰 증진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도 한반도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통일외교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에 집중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특성으로 인한 돌발사태의 야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 현 체제의 유지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지적되고 있지만 체제 몰락이라든지 무력사용과 같은 급변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대비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주변

국의 개입 가능성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견제 및 반발 등 두 가지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둘째, 북한의 비폭력적 붕괴 유도, 셋째, 한반도의 통일달성이라는 목표아래 「통일을 이끌어내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는 동북아 4강과 남북한간의 관계뿐 아니라 4강국간의 역학관계-특히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능력 범위내에서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일 예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정부차원 전환과 같은 강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4강간의 안보대화를 정례화·심층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평화구축과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명분을 설득력 있게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족 자결권 보장, 냉전의 완전한 해소 등 시대정신에 합당하고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춘 개념화가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냉전시대 유럽분단의 극복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조명함으로써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롭고 하나가 된 유럽」의 출범이 없이는 진정한 냉전의 종식을 말하기 어려우며, 하나가 된 유럽의 상징이 바로 독일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독일통일의 명분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분단국의 통일에 있어서 명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한국도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구축 후 지역적·시대적·이념적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적절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현 김대중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정부는 새해 첫 국가 안보회의를 통해, 1999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신년 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국간 대화상대의 3대 전제조건으로서, 반외세자주, 연공연복(聯共聯北), 그리고 국가안보법·통일부·안기부 등 「과쇼」제도의 철폐와 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당국간 대화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역 및 국제단위체를 포함하는 초국가 단위체와 지방 및 비정부 단위체를 포함하는 하위 국가단위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대화의 복합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첫 번째 기반인 사상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나 사소한 비 계급적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동시에 북한은 「강성대국」 두 번째 기반으로 군사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니고 계급적 원수들과 끝까지 싸우는 사나운 맹호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교류협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세 번째 기반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제일 먼저 농업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대북 농업개발 지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핵시설과 미사일 실험 등의 현안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한반도 보안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금창리 지하 의핵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강성대국론」으로 무장한 북한과, 제네바핵합의 이후 지난 4년간의 포용정책의 실험에 지친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위협외교를 배제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대한 조심스러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신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분명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엄존하는 냉전적 현실을 신중히 고려한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냉전과 탈냉전의 이중구조가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책의 성공여부가 시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기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노력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측은 이 문제의 핵심을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국제정치의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내부개혁 없는 일괄타결 안은 끊임 없는 일괄타결의 악순환이라는 비극을 탄생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남북관계의 분석위에 신중한 정책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진계(1990), 「조국」하, 현장문학사.
- 김성철(1998.10),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박영호외 3인(1997),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 이종석(1997),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_____(1996), 「북한 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 역사비평사.
- 이현경(199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全賢俊(1994), 「金正日 리더쉽 研究」, 민족통일연구원.
- 井上周八(1983), 권순휘 옮김, 「현대조선과 김정일 비서」, 평양:건역사.
- 최완규(1996), 「북한은 어디로: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경남대학교 출판부.
- 통일부(1998.9.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결과」, 통일부.
- 韓國銀行(1996.6), 「1995년~北韓 GNP 推定結果」.
- C. 브린튼著(1978), 崔明官 譯, 「革命的 解剖」, 서울:三中堂.
- 사회과학출판사(1985), 『경제사전』 2, 평양:사회과학출판사.
- 「김정일선집」 1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노동당출판사(1982), 『인민의 지도자』 1. 2.
-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제4집.

<논문>

- 고병철(1998), “김정일정권의 정치체제·비교적 시각”,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고성윤(1998),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화전략 분석”, 국방논집.
- 고성준(1998),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대북정책의 과제”, 「통일문제연구협의 회세미나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고유한(1997), “김정일의 공식 승계와 정책 변화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 김도태·조민(1998),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 김성철(1998),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 김연철(1998), “가부방적 권력과 군사국가의 결합”, 『통일한국』10월호.

김영목(1998), “북한의 대미관계 전략”, 『통일경제』, 11월호, 현대경제연구원.

김정일(1992),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동용승(1997), “탈북자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 『삼성경제』, 통권 제57호.

오관치(1998), “김정일 정권의 전략상황과 남북관계 전망”, 국방논집.

윤진현(1986),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주제사상연구』, 형설출판사.

이서항(1998),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의 재정립”, 『통일연구논총』, 민족통일연구원.

정규섭(1998), “김정일 체제의 위기 구조와 안정성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정창현(1998), “새대교체와 당·정·군의 관계 변화”, 『통일경제』, 10월호, 현대경제연구원.

최원기(1999), “핵개발, 국방용인가 대미협상 카드인가”, 월간중앙 1999.1월호.

한중호(1997),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실제와 전망”,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홍석(1998), “북중관계와 북한 대외전략의 변화”, 『통일경제』 11월호.

허문영(1998),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대남정책 전망”, 통일경제,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내외신문」, (1997.10.9)

「내외통신」, (1981.6.6),(1983.12.2),(1984.11.30),(1987.12.11),(1997.4.24).

「로동신문」,(1991.5.27),(1992.2.4),(1994.1.5,8,28),(1995.12.25),(1997.1.1,4,10,7.20,8.20),(1998.1.1,1.30).

「동아일보」, (1997.10.9),(1997.2.4).

「조선일보」, (1997.4.22),(1997.5.16),(1997.3.20).

「중앙일보」, (1997.3.20),(1997.4.25).

『통일일보』, (1996.11.30).

<Abstract>

The Study on Jung-il Kim's Regime

- Focused on Its Developing Process and the Prospects for Shifts in Its Policy -

Kang, Young-sik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u

South Korea's basic policy toward the North can be expressed as what we call "Sunshine Policy", which helps keep the Korean peninsula stable and peaceful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 stability on this peninsula is essential for its ultimate purpose, peaceful reunification.

Jung-il Kim's intention is to make the domestic problems international and to take extreme military measures continuously for the resolution to the internal difficulties of the North. He intends to attribute all the internal problems to the outside world and to arouse people's attention and hatred for their tolerance. Besides, by maximizing the threats of the North, he tries to make the parties concerned solve actively the problems.

It's not likely that there will be power replacement or collapse of the ruling system of socialism in the near future in the North, considering the dynamics of power system and the improbability of resistance from the lower class. The North does not appeal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ven in its crisis, but rather pursues internal solidarity by keeping hostile relationships, in order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South Korea should revise the whole policies for diplomacy, security and reunification from a different viewpoint, considering the political standpoint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the U.S.A. that expects the collapse of the North and intends to deal with the process of it, Japan that tries to take a role in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the expense of unexpected early reunification, and Russia that would take an intervention inevitably in case of war on this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presume the possibility of intervention and the restraint on reunification from the surrounding countries, in case a critical situation happens in the North. In preparation for that, South Korea should develop 'the diplomacy toward reunification', with the aims, such as the prevention of the second Korean War, the initiative of nonviolent collapse of the North, and the achievement of reunification.

South Korea should be expected to make deliberative short and long term plans for the resolution to the cold-war situation, analyzing the justification theory, diplomatic strategy, big military power theory, and the critical or stable phases of the Nor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ly,1999.